

자본주의 vs 민주주의
민주주의 확대의
진정한 동력

▶ 8 ~ 9 면

KTX 민영화 저지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 7 면

서평
장하준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11 면

보시라이 축출
대중 저항을 겁내는
중국 지배자들

▶ 13 면

제주 해군기지 반대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에서 배운다

▶ 10 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제79호 | 2012년 4월 14일 ~ 4월 27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레프트21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민주당에 대한 여전한 불신 박근혜는 이를 잘 이용했을 뿐 우파 결집과 진보정당 전진으로 나타난 정치 양극화

》관련기사 3·5면

이번 총선 결과는 노동계급의 선진 대중과 진보 염원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에서 드러났듯이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이들의 급진화와 열망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보여 줬다. 덕분에 이득을 본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한 급진화는 통합진보당의 전진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사회 양극화는 좌우 정치 양극화를 낳고 있다.

민주당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 정치 양극화 속에서 기회주의적 중도세력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다. 지난해 말 일부 NGO 리더들과 양대 노총 전 위원장들까지 끌어들이는 '좌클릭'을 하며 새 출발을 할 때만 해도 민주당의 앞날은 밝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다.

포퓰리스트(계급 동맹적) 자본주의 정당이라

는 민주당의 기본 성격은 변하지 않았고, 과거 정부 10여 년 동안 민주당 세력이 저지른 배신도 너무 최근의 일이어서 대중의 기억에서 쉽게 지워질 수 없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예컨대 김진표 공천 등 공천 과정에서 진보 염원 노동자·청년의 실망만 자아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한미FTA 발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우파의 정면돌파에 부딪히자 말 바꾸기와 갈팡질팡만 거듭했다. 그래서 많은 반우파 노동자·청년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다. 이번엔 투표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문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

현 정부의 주요 우파적 정책들에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 민주당의 알맹이 없는 '정권 심판'론에 많은 노동자·청년들이 굳이 투표소에 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 민주당에 투표했을 때 과연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지 못한 것이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의 부족함을 메우려 한 것도 대세를 바꿀 수 없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사람들은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천안함 북풍 국면에서 수구 냉전 회귀 위험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투표소로 몰렸다. 지난해 말 서울시장 선거 때는 NGO 리더 박원순이라는 대안이 있었던 것이 주효했다. 반면 이번에는 그런 요소들이 없었다. 천안함 때와 달리 이번 북한 위성 발사 문제는 진보 지층의 냉전 위기의식을 크게 일으키진 않았다. 제국주의 압박의 직접적 결과이기보다는 북한 관료의 국내 지배용이라는 점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3면으로 이어짐



서용익 기자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백탄남”

이명박의 새 별명,
백 가지 탄핵 사유가 있는 남자라는 뜻

“원자력 발전을 해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핵물질들을 소진시킬 수 있다.”
청와대, 이렇게 깊은 탈핵 의지가?

“0.5퍼센트 정도의 실수는 범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
왜 불법 사찰을 했냐는 질문에

“이념 논쟁만 벌이면 소는 누가 키우나요.”
박근혜, 색깔론 선봉장이 누구였지?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해군기지로 유명한 동양의 하와이로 만들겠다”
박근혜, 하와이가 제2차세계대전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나?

“민정 씨와 연애할 수 있지만 민정수석과 연애할 마음이 없다.”
사찰 피해자 김제동

“이러다 BH를 북한이라 할지도 모르겠다”
민주당 백혜련

“도덕적으로 완벽한가키는 꿀 먹은 벼어리가 되었다, 어느 사찰에 가서 묵언수행 중인가, 왜?” “썩” 소리도 없답니까?”
명진스님

“밤말은 ‘쥬’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사찰 공범이라는 한 네티즌

“여성은 언제나 혼외정사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시해야 한다. 남성은 자식이 자기 유전자를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계속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우파 지식인 복거일의 황당한 여성관

“이러다가 BBK도 사실은 노무현 것이라고 기와집에서 성명 내는 사태 나오겠다.”
유시민

“나는 캠프가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후보의 TV토론 거부 사유,
이런 로봇들이 151개가 생겼다.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금요일 저녁 7~8시 (다음호는 4월 27일)

강남역 11번 출구 글라스타워 앞
신촌역 3번 출구 백도널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대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름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수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살인 사건

경찰이 사찰·탄압에만 유능한 이유

이번 수원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무능력한 태도는 보통 사람들을 범죄에서 보호하는 게 경찰의 구실이라는 신화를 무너뜨리고 있다.

“성폭행 당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힘겹게 가족을 부양해 오던 여성이 전화기를 붙들고 절규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통화시간과 통화 내용을 속이며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

게다가 경찰은 7분 30초 동안이나 여성이 폭행당하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부부싸움인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인데”라며 누장대처했다. 이것은 성폭력 문제를 보는 경찰들의 여성차별적 의식 수준을 드러낸다. “부부싸움”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성폭력이 벌어져도 상관없단 말인가? “단순 성폭행인줄 알았다”는 경찰의 변명은 그야말로 경악스럽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상담의 85.1퍼센트는 “아는 사람”에 의한 것이었다. 이번 일은 경찰이 이런 성폭력은 아예 자신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다.

사실 경찰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언제나 무능력했다. 2004년 연쇄살인으로 떠들썩했던 유영철이 “대부분 내가 자백해서 수사가 이뤄졌을 뿐 경찰과 검찰이 밝혀낸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듯 말이다.

TV에서는 경찰이 범죄 해결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지만 이는 그야말로 이미지일 뿐이다. 경찰이 우리 사회에서 진정 주력하는 일은 사회 지배층의 재산과 권력, 특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고충과 불만을 해결하는 데는 그토록 무능한 경찰이 테러진압용 무기를 사용해 쌍용차 노동자를 진압하고, 용산의 철거민들을 6명이나 죽이고, 최루액을 쏘며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탄압하는 일에는 능수능란하다.



용산 참사 분향소 경찰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은 우선 순위로 삼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문제삼는 제보였다면, 경찰은 1분 만에 정확히 도착했을 것이다.

이번 살인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 줘도 못 알아듣던 경찰이 정권의 지배를 위해 노동자와 진보 활동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일일이 사찰한다.

지난해 경찰이 쌍용차 폭력진압을 “우수 수사” 사례로 뽑은 것은 그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이번 일의 책임자인 경찰청장 조현오는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기경찰청장이었고, 경기경찰청장 서천호는 강정마을에 경찰력을 투입했고, 부산경찰청장 당시 ‘희망버스’를 탄압했던 장본인이다. 경찰에서는 이런 자들이 승진가도를 달린다.

소수 지배층이 다수 대중을 지배하기 위한 폭력 수단이라는 경찰의 본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동안에도 지배계급은 이번 일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는 데 여념이 없다.

우파 결집의 소재

우선 우파들은 총선을 앞두고 살인범 위원촌이 피해자를 어떻게 토막냈는지 등 범죄 과정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며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부추겼다. 이런 강력범죄는 매우 드물게 벌어지지만 문제를 과장하며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키려 했다. 이런 술수들은 저들이 이번에 우파를 어느 정도 결집시키는 데 하나의 요소가 됐을 것이다. 우파들은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도 범죄를 이용해 우파적 의제를 부각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버마

아웅산 수치의 승리와 새로운 위험

버마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버마 정부에 참가할 예정이다. 그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4월 2일 실시된 45개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44곳에서 당선했다고 선언했다. 공식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선거가 실시된 바로 그날, 버마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환율에 자국 통화를 연동시키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버마에서 공식적으로 민간 정부가 들어선 것은 채 2년이 되지 않았다. 군부는 군장성 출신인 테인 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현 정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총선이 2010년 열렸지만 이 선거가 사

기였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의석 중 25 퍼센트가 군부에게 보장됐다.

2010년 총선 이후 버마 정권은 정치수백 명을 석방하고 노동조합을 합법화했으며,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내전을 중단하는 휴전협정을 맺었다. 오직 소수민족 카친족에 대한 전쟁만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버마 지배자들은 경제자유화 정책을 시작했다. 심해 항구 다웨이 항을 버마 최초의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있다. 장성들은 오랜 정치·군사적 고립을 끝내고 싶어 한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봉쇄조치 때문에 버마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 경제 중 하나다.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무역 봉쇄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 모두 버마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의 뿔마당에서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돈벌이

아웅산 수치는 평생을 억압적인 군부에 맞서며 영향력을 획득했다. 그녀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에 거리에서 축제가 벌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테인 세인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다. 수치가 테인 세인 정권에 참가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

또, 우파언론들은 “법과 기강을 정비”하며 이번 일을 경찰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험에 보여 주듯이 경찰력 강화는 범죄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 등을 탄압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크다.

〈조선일보〉는 “조선족 연쇄살인범”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감도 부추기고 있다. 조현호는 경찰청장을 사퇴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처럼 우파가 이 문제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속죄양 삼으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우선 우파의 공격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2009년 경찰 백서〉에 따르면 한국인 1백 명 당 범죄율은 4.1명이고 외국인 거주자 범죄율은 1백 명 당 3.9명으로 외국인 범죄율이 더 낮다. 또 2008년 전체 범죄 건 수 중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퍼센트에 불과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통계상으로도 중국 동포 범죄율은 0.5퍼센트 정도로 미미한데 이들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이번에 벌어진 범죄의 근원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가난과 소외가 있다. 위원촌은 중국에서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한국에서 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지냈다고 한다.

가난과 외로움, 소외를 겪으며 추악하게 병들어간 위원촌 개인을 악마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우파의 역겨운 선동을 반대하면서, 나아가 범죄의 근원인 가난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려 해야 한다.

정선영

일 수 있다. 아웅산 수치는 동남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버마장성·서방 자본가들과 협력하는 상황에 곧 직면할 것이다.

심지어 암흑 같은 군사독재 때도 평범한 버마 민중 수천 명이 야만적인 정권에 맞서 투쟁했다. 그들은 이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커다란 자유가 보장되는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고 약속 받고 있다. 만약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버마 민중은 더 나은 조건에서 투쟁할 것이다.

데이브 세일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297호 / 번역: 최용찬

계속되는 유럽의 초대형 반긴축 투쟁

유럽에서는 자본가들이 조래한 위기의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는 야만적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연금 삭감에 고통받던 77세 노인이 연금 삭감에 고통받다가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청년들이 일어서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

크게 분노한 사람들은 아테네 전역에

서 시위를 벌였다. 연일 ‘긴축 자살’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

스페인에서도 최근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우파 정부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벌어졌다.

노동자 1천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2백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우파 국민당(PP)이 작년 11월 스페인 사회당에 대한 대중적 실망에 힘입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국민당이

더 가혹한 긴축 정책을 벌이자 집권한 지 석달 만에 스페인 역사상 가장 큰 파업 중의 하나가 벌어진 것이었다.

우파 정부는 충격을 받았지만 추가 긴축 정책을 도입했다. 분노한 노동자들의 압력을 받은 노동총들은 5월 1일부터 또 다시 대규모 투쟁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

스페인 노동자들이 그리스와 함께 유럽의 반긴축 투쟁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욱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4월 21일(토) 오후 2시 서울역
철도노동자 3차 총력 결의대회
'멈춰라 KTX 민영화'
주최: 철도노조

5월 1일(화) 시간·장소 미정
122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노동자대회
주최: 민주노총

4.11 총선 평가

민주당의 궤죄죄함에서 득을 본 박근혜

전지윤·최일봉·최미진

▶ 1면에서 이어짐

KBS 파업 노동자들이 폭로한 불법 사찰 사건도 민주당은 활용할 수 없었다. ‘노무현 때도 사찰했다’는 청와대와 박근혜의 물타기에 설득력 있는 변명을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파의 ‘김용민 막말’ 마녀사냥에도 기회주의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만 보였다.

그래서 많은 진보 염원 노동자·청년은 굳이 투표소에 갈 동기와 의욕을 갖지 못했다.

디도스와 돈봉투 사건이 잇달아 터진 지난해 연말 우파의 위기는 심각했다. 그러나 이들은 곧 뻔뻔스런 뒤집기 시도에 나섰다.

먼저, 조기등판한 박근혜가 ‘쇄신’ 사기극과 간판 바꾸기를 하며 이명박 색깔 빼기를 했다. 이제 우파의 얼굴과 실질적 주인은 박근혜가 됐다. 이어서 정권은 한미FTA 발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반우파 정서를 뒤집지 못할 바에야 우파 지지층이나 마 확실하게 결집시키려 한 것이다.

언론 파업에 대해서도 무지막지한 탄압을 지속했다. 이런 문제들에 힘을 집중해서 정면돌파하려고 다른 전선에서는 양보를 했다. 학생들의 분노 폭발 위험을 의식해 등록금 절감 인하와 청소년 노동자 임금 인상 부분 수용을 한 일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우파는 민주당이 한미FTA 등을 시작한 장본인이고 진정으로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나아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북풍 물이, 마녀사냥, 색깔론 등 온갖 구태의연한 수구적 방법으로 우파 결집에 매달렸다.

막판에는 나꼼수 김용민이 예전에 성인방송에서 한 말을 맥락에서 떼어내 공격 소재로 삼았다. 5년 동안 전방위적 개악과 수구적 작태를 자행한 우파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를 난데없이 8년 전 김용민의 실수 심판으로 바뀌치기하려 한 것

이다. 여기저기서 흠탕물을 튀기고 악취를 풍기며 짧은층이 ‘더러워서 투표 안한다’는 심정을 갖도록 애썼다.

우파의 새 얼굴로 등장한 박근혜는 손에 봉대를 감고 전국 ‘대장장’ 유세를 하며 인간임을 썼다. 박근혜는 부패하고 탐욕스런 1퍼센트만의 대변자라는 ‘이명박근혜’의 본질을 숨긴 채, 우파 지지층의 향수와 동정심, 지역주의 등을 자극하며 표를 결집시켰다. 청년층의 정치적 급진화 속에서도 노동계급의 계급투쟁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이 지역주의가 먹힐 틈을 제공한 것이다.

우파 거물들의 퇴출

그러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얻은 성적과 영향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우파는 이번에 진보 지지 노동자·청년들이 충분히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서 패배를 모면한 것일 뿐이지 힘을 키운 게 아니다. 실제로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우파의 득표는 오히려 줄었다.

당시 주요 우파 정당이던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은 1백85석을 얻었고, 정당비례에서 9백85만여 표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의석은 합쳐서 1백57석이고, 정당비례 득표는 두 당을 합쳐 9백81만여 표에 그쳤다. 투표율이 높았는데도 정당 득표는 오히려 약간 줄어든 것이다.

우파의 이 성적은 한두 가지 이슈에서 ‘좌클릭’을 하고 빨간 잠바를 입고 다니면서 겨우 지켜낸 것이다. <조선일보>도 이번 선거에서 “우파 이슈의 실종 사태”를 한탄했다. 홍준표, 홍사덕, 전여옥 등 우파 거물들의 패배와 퇴출도 반가운 일이다.

이 모든 일들은 2008년 촛불항쟁 이후 계속돼 온 급진화의 결과로 진보진영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한국 정치의 중심이고 키를 쥐고 있는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은 거의 2004년 탄핵 때 수준으로 참패했다. 박근혜 대세론을 위협해 온 ‘확장성’의 한계가 여전한 것이다. 박근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 매달렸던 부산에서도 문재인과 야당 세력이 어느 정도 부상했다.

민주당은 18대 총선 당시 88석에서 이번에 1백27석으로 늘었고, 정당 득표는 당시 4백30만여 표에서 이번에 7백77만여 표로 늘었다. 진보정당의 성장은 더 두드러진다. 18대에 진보정당들은 의석 5개와 정당 득표 1백47만여 표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의석이 두 배가 넘는 열셋이 됐고, 정당비례 득표율도 2백54만여 표로 4년 전보다 1백만 표가 넘게 늘었다.

현재 불균등한데다 아직 충분히 좌경화되지 못한 청년층 급진화는 박원순, 나꼼수 등으로 상징되는 민주당 왼쪽 스펙트럼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못해 차선, 심지어 차악 선택이라는 심정으로 민주당에 투표했을 것이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급진화 정서를 진보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로 표출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제3당으로 부상했다.

통합진보당의 전진이 보여 준 것

통합진보당은 13석(지역구 7석, 비례 6석)을 얻어 사상 최다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특히 그동안 기반이 약했던 수도권에서 4명,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3명이 당선하며 교두보를 확보한 것은 고무적이다.

당선하지 못한 후보들도 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호남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은 민주통합당 후보들과 겨워 평균 24퍼센트가량을 득표했다. 홍희덕·문성현 후보 등도 45퍼센트 넘게 득표하며 새누리당을 위협했다.

두 주류 정당 사이에서 진보정당이 압착될 수 있었고, 새누리당과 우파가 대대적인 ‘종북좌파’ 마녀사냥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꽤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진보 후보에 대한 투표는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의 계급 투표 성격이 있었다. ‘삼성 저격수’ 노회찬 대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의 대결이 대표적이다. ‘최루탄 의거’로 상징되는 김선동 후보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한 민주통합당의 노관규에 맞서 승리했다. 통합진보당과 후보들에 대한 지지는 한미FTA 발효, 제주 해군기지 건설, KTX 민영화 추진 등에 대한 노동자들과 피억압 대중의 계급적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당선한 통합진보당 후보들은 대부분 민주당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민주당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진보와 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한겨레〉)이 드러났다. 게다가 호남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들과 경쟁해서 승리하기도 했다.

물론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후보를 단일화한 것이 통합진보당의 선거적 이익에 도움이 됐다. 민주당이 불출마해 표를 분산시키지 않음으로써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야권연대는 반우파 진영이 후보를 단일화해 우파 후보를 패퇴시켜야 한다는 진보 염원 대중의 정서에 부합했다.

이 때문에 이 신문의 지지자들도 진보적 대중이 지지할 만한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진보정당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면 우파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야권연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또, 진보 후보가 없거나 사퇴한



99퍼센트의 계급적 분노를 보여 준 통합진보당의 약진

지역에서 야권단일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의 후보가 대중에게 개혁적으로 여겨진다면 그 후보에게 비판적 투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참여당 출신 후보들은 전복의 한 석을 제외하곤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것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참여당이 지난 정부 실패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대중적 인식 때문일 것이다.

노동자 벨트

통합진보당의 성과 속에서도 노동자 밀집 지역인 ‘영남 노동자벨트’에서의 결과는 아쉬움을 남기는 게 사실이다. 이것은 진보대통합의 실패와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 과정에서 벌어진 진보정당 간의 분열이 낳은 결과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투표 방침을 둘러싸고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가 재소집된 것이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경남 거제에서는 통합진보당의 비협조 속에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가 3퍼센트 차이로 우파 후보에게 패배했고, 창원에서도 진보신당이 단일화를 거부해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가 5퍼센트 차이로 우파에게 패배했다. 통합진보당 지도자들은 실용주의적으로 진보의 단결보다 민주당과의 무원칙한 동맹을 더 우선했

고, 진보신당 지도자들은 진보의 단결 자체를 거부하는 종파적 태도를 보였다. 양쪽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실 이번에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물지마 야권연대’를 추구하면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과 진보적 대안 제시가 실종된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야권연대 정책합의문에서 한미FTA 폐기, 핵발전 폐기,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등의 내용도 후퇴했다. 김진표 등 새누리당 후보와 다를 바 없는 자들과도 단일화를 했다.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아예 민주당의 색깔인 노란색 점퍼와 스카프를 매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진보의 가치와 대의 보다는 의회 진출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우선시하면서 주류 정치의 잘못된 관행을 배우며 분란과 잡음이 일어나는 씁쓸한 일도 벌어졌다.

무엇보다 물지마 야권연대를 통한 선거 심판론에만 의존하면서 진보진영의 단결과 투쟁 건설이 뒷전으로 미뤄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것은 민주당이 채워줄 수 없는 진보적 대안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향해 진보정당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좌파들이 이런 것을 문제삼아 통합진보당은 아예 진보가 아니라며 매도하고 투표조차 거부한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다. 진정한 좌파는 개혁주의의 정당을 그저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우파에 맞서 비판적 지지도 하면서 사태에 영

향을 미치고, 개혁주의의 정당을 지지하는 대중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5면으로 이어짐

폴라주 72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건축학개론



illusion

사회운동에 대한 불법 사찰 사건

1퍼센트의 지배를 위한 감시와 탄압

김문성

청와대의 불법 사찰은 이명박을 정점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동원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다.

〈오마이뉴스〉가 폭로한 사찰팀의 보고서 작성 지침에는 “구체적 상황과 대상자의 역할에 대해 본인(작성자)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고 돼 있다. “BH[청와대를 가리킴] 하명”이 사찰팀의 핵심 임무였던 것이다.

촛불 보복도, 쌍용차 살인 진압도, 심지어 연예인 방송 퇴출마저 모두 정권 차원의 공작이었다는 것이 새삼 밝혀지자 광범한 사람들이 4·11 총선을 정권 심판 선거로 삼을 듯 보였다.

그러자 곤혹스런 처지가 된 박근혜는 “나도 피해자”라며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피해자’론은 구역질나는 것이다. 그는 불법 사찰에서 득을 봐 온 공범이다.

박근혜는 1퍼센트 특권층의 일부로서, 이명박이 정권 차원의 감시와 통제로 저항 세력을 압박하면서 추진한 우파 정책에 동조해 왔다.

그래서 2010년 불법 사찰이 드러나 증거를 조직적으로 폐기해 일부 깃털들이 구속될 때도 박근혜는 침묵으로 동조했다.

게다가 박근혜는 이번 총선에서 ‘불법 사찰’의 주요 책임자들인 김종태와 김희선을 당선 확실 지역인 경북 상주와 서울 서초갑에 각각 ‘전략’ 공천해 당선시켰다.

사찰팀이던 원종연이 2009년 작성한 수첩에는 “BH, 공직기강, 국정원, 기무사도 같이 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김종태는 당시 기무사령관이었고, 김희선은 국가정보원의 제2차장이었다.

불법 사찰에서도 이들은 영락없는 ‘이명박근혜’인 것이다.

계급 지배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지 이명박 도당의 ‘공권력’ 사유화 따위가 아니다.

이명박의 사찰팀은 구성되자마자, “촛불집회 검거 수법 사례 보고”, “불법시위 근절 대책 건의” 등을 제출했다.

그 직후 광범한 체증을 통한 촛불시위 참가자 검거와 백골단을 연상시킨 경찰



쌍용차 살인 진압 결과 보고? 불법 사찰의 본질은 '조사와 '분석'을 통한 노동자 '기획' 탄압 공작이었다.

기동대 창설 계획 등이 실행됐다.

같은 해 “쌍용차 작전 조사 결과 보고” 문건을 보면, 최근까지 무려 스물두 번째 죽음을 낳은 쌍용차 정리해고와 살인 진압에 정권 차원의 기획과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천인공노할 사실에 분노를 도저히 억누를 수 없을 정도다.

결국 촛불항쟁이 지배계급 주류에게 안겨 준 수모를 되갚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 탄압, 언론 장악 등을 강행하려는 것이 바로 ‘불법 사찰’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1퍼센트 세력의 지배 도구인 군대·경찰·법원·관료기구 등 억

압적 국가기구를 총동원해 99퍼센트 민중의 운동과 활동가들을 감시하고 탄압을 기획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검사·판사 들은 물론 부차적 사찰 대상이던 경쟁자 박근혜와 재벌 총수들까지도 이번 사건을 묵인·비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계급 지배의 주요 수단이라는 이런 근본 성격 때문에 사찰기구를 통한 사회운동 감시·통제는 정권을 관통하며 계속돼 왔다.

박정희·전두환 때는 물론이고 민주화 이후 선거로 집권한 노태우도 군부인 보안사를 통해 진보진영을 사찰하다 들

통났다.

김영삼은 경찰청 사직동팀 등을 두고 전방위적 도청·사찰을 수행했고 안기부 사찰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노동악법과 함께 날치기했다가 민주노총의 파업으로 몰락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검찰 등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공작을 했다가 들쭉날쭉고, 경찰의 노동운동 감시·탄압도 계속됐다.

노무현 정부가 현대차노조와 화물연대 등을 사찰한 것도 노동운동을 감시·통제하는 맥락이었다. 사실 이명박의 사찰팀도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을 본따 만든 것이다.

주요 표적은 노동운동이었다

이명박은 촛불항쟁이 한창이던 2008년 7월 초 국무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었다.

역압적 국가기구가 전방위적으로 동원됐고, 은폐 과정에서는 검찰이 협조했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사도 협력했다. 집권 여당과도 정보를 공유했다.

실무에는 경찰·국정원·기무사 출신의 보안경찰들과 노동부와 우파 노조관료 출신들이 동원됐다. 구성에서부터 노동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 감시·단속

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찰팀 이창화의 수첩에는 민주노총과 다함께 등 진보 단체들에 관한 내용이 잔뜩 적혀 있었다.

특히, 이영호가 이끌고, 보안 수사관 출신과 노동부 출신으로 구성된 점검1팀은 “쌍용차 작전 조사 결과 보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파업 동향”, “09년 좌익세력의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 등 사찰과 탄압 대책을 세워 왔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감시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탄압과도 유기적으로 연계

돼 왔다.

일례로 ‘권정환 전공보 부위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 및 형사처벌 조치 계획’이 10월 6일 보고됐는데, 마포구청장은 10월 7일에 서울시에 권 부위원장을 파면·해임해 달라는 ‘공무원징계요결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런 탄압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감시·통제를 벌였다. 원종연의 수첩에는 사찰 방법으로 “HP 도청 열람”, “장비(노트북, 망원경, 카메라)” 등이 나온다.

정권 퇴진, 관련자 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요구해야

사찰의 총책임자인 이명박은 퇴진해야 하고, 임태희, 권재진 등 관련자들은 전원 구속·처벌돼야 한다.

사찰에 동원된 각종 사찰기구와 국정원·기무사·검찰·경찰의 공간부서 등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NGO와 진보진영 지도자들이 고작 ‘이명박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라’ 하는 수준에서 머물며 퇴진 요구를 애써 회피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특검이나, 청문회나 하는 논란에 매달리는 것도 시간 낭비로 보인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특검을 실시하자고 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몰타기할 시간을 벌면서 정권심판론을 피해 보려는 술책일 뿐이었다.

1999년에 도입된 이후 10여 차례 시행된 특검이 사건의 몸통을 밝혀낸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는 데다가 기존 국가기구에 완전히 둘러싸인 채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집권 시절 자행한 노동운동 사찰이 드러났는데도 사고는커녕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에게 사찰의 ‘진상’을 밝혀낼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기도 힘들다.

이명박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퇴진 요구를 피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진보진영은 노무현 정부 말년인 2007년 한미FTA 체결 직후에 정권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이러다가 박근혜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거나 ‘이명박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크게 다르겠냐’ 하는 물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눈치를 보며 ‘노무현의 사찰은 이명박과는 다르다’거나 이 사안을 더 큰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길 회피하는 일부 지도자들의 태도가 오히려 문제다.

그런 태도야말로 박근혜가 이명박과 선을 그으면서 위기를 벗어나려 할 때 의도치 않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총선 결과가 그 증거다.

이명박 같은 철두철미한 1퍼센트의 대변자는 단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다.

게다가 정권을 퇴진시키려면 우파 전체에 맞선 거대한 대중 투쟁이 필요한데, 이런 투쟁을 제대로 건설할 때, 진정으로 정치 지형을 진보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만일 그런 대중 투쟁으로 정권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 뒤 집권할 정부는 누구든 지금까지처럼 함부로 99퍼센트를 짓밟는 정책을 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찰의 주요 표적이었던 노동운동과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이 앞장서서 정권 퇴진과 관련자 구속·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요구하며 투쟁을 적극 건설해야 한다.

진보 단체들이 모인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약칭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은 바로 이런 투쟁 건설에 적극 헌신해야 한다.

사찰 피해 활동가 기고

“이명박 불법 정부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

권정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사무국장

나는 2009년 공무원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다.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청와대가 관여한 불법사찰 2천6백19건을 공개했다.

그리고 내 해고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원,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 서울시청, 마포구청이 서로 협조하면서 기획한 것으로 폭로됐다.

〈경향신문〉 4월 4일치 기사를 보면, 2009년 10월 6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전공보 부위원장 불법행위 조치 계획’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나를 징계하라고 서울시에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신지호 의원의 협조를 받아 나를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당시 마포구청은 내가 신지호 의원에



게 전화를 걸어 막말을 했고 이것이 조종동에 기사화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나를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에 전화를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신지호 의원의실의 정상훈 보좌관이었다. 그는 내 동의도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 그 내용을 〈동아일보〉에 제공해 기사화했다.

그리고 당시에 내가 신지호 의원실에

한 말은 막말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불법성과 부도덕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미국 축산 자본의 이익을 위해 광우병 의심 쇠고기를 수입했고, 4대강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을 경찰의 곤봉과 방패로 진압했음을 말했다. 또한,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장·차관들이 탈세와 뇌물, 논문 표절, 땅 투기, 불법 농지 소유와 같은 온갖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자들임을 폭로했을 뿐이다.

내가 사찰을 당하고 해고가 된 이유는 바로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FTA 반대, 부당한 행정 명령 거부 같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1퍼센트 부자와 정권만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99퍼센트의 권리를 옹호하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려고 한 것 때문이며,

이러한 활동이 이명박 불법 정부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정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나와 공무원노조의 모든 활동은 정당한 활동이고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자행한 불법 해고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정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권력 남용으로 해직된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은 즉시 원직 복직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신지호 의원의실은 공무원노조가 해고자를 포함하고 있고 ‘불법적’인 정치 활동과 집단행동을 한다며 불법 단체라고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 행위를 하는 자들은 이명박 정부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해산돼야 할 것은 공무원노조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

나와 공무원노조는 전체 노동운동·진보운동 진영과 연대해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자본주의와 계급지배, 사찰

진보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사찰은 이 정부가 얼마나 아래로부터의 투쟁 가능성에 노심초사해 왔는지 보여 준다.

특히 정권의 정당성에 깊은 상처를 남긴 2008년 촛불항쟁 이후 이명박 정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비공식 사찰 기구들을 만들고 전방위적 미행·감시·도청·감청 등을 통해 투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려 한 듯하다.

이명박과 이상득의 측근들로 구성된 영포라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배치하고 국정원, 경찰, 검찰, 기사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보운동과 사회운동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물론 사회운동 활동가들뿐 아니라 일부 새누리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도 이 기구들이 동원됐다. 마르크스는 이런 지배자들 사이의 이전투구를 보며 “싸우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강조점은 싸운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형제들”이라는 데 있다.

민주당 집권 시절에도 현대차 노조, 화물연대, 공무원 노조 등 노동운동에 대한 사찰이 행해졌다는 점이 이를 보여 준다.

이명박 정부와 달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출신 인사들을 정부에 참여시킨 민주당 정부에서 ‘합법적’ 정보 취득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당시 현대차 노동자들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은 정부의 핵심 관계자였던 문제인이 이를 두고 합법적인 업무였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들의 DNA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사찰 대상을 시민단체 등과 심지어 일부 정치인, 재벌로까지 확대하고 비공식적인 사찰 기구까지 만들었다. 독재정부의 후예로서 권위주의적 유산을 부활시키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두 정부 모두에서 국정원, 검찰 같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사찰 기구들은 청와대의 지시 없이도, 심지어 정부 내에 일부 조심스러운 견해가 있는데도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국가의 본질

바로 이 점에서 계급지배의 기구로서 국가의 본질이 드러난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군대 등 선출되지 않는 국가 기구들의 핵심 임무는 폭력을 바탕으로 한 강제력으로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보존하는 것이고, 이 질서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지배력을 구현한다.

이들이 국민의 사유재산을 지킨다고 할 때 실제로는 자본가들의 사유재산을 노동자들에게서 지키는 것을 뜻할 뿐 그 반대가 아니다.

법을 어겼다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퍼붓고 몽둥이를 휘둘러 공장 지붕에서 떨어지도록 만든 경찰이 어느 재벌 총수에게도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경찰이나 검찰, 혹은 기사사 같은 기구들이 일상적으로 재벌 총수를 감시하고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마르크스는 국가를 “부르주아지 전체의 공동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노동자 계급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는 이런 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물론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지적했듯이 지배자들이 이런 방식만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평상시에 지배자들은 언론·교육 등을 통해 터무니없이 불공평한 일을 정당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일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투쟁 의지와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질서에 도전하지 않게 함으로써 “지적·도덕적 지도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국가의 계급적 본질을 보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집권하거나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국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활용해 체제의 피해를 교정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췄다는 영국에서조차 1970년대에 보안경찰이 공작을 벌여 월슨의 노동당 정부를 흔드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 바 있다. 1970년대 초에 영국을 휩쓴 노동계급의 반란을 보며 겁에 질린 영국 군사정부부 제5국(MI5)은 ‘시계태엽오렌지’ 작전으로 사찰·도청·납조를 통해 노동당 인사들에게 간첩 혐의 등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 월슨이 물러나고 1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이 모든 것이 완전한 납조였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사람들이 저항하기 시작하면 지배계급은 더 노골적으로 억압적 국가 기구들을 이용하고 강제력에 의존한다. 이명박이 촛불 이후에 한 일들처럼 말이다. 이처럼 **국가가 본색을 드러낼수록 ‘동의를 의한 지배’는 약화된다.**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할수록 이런 일들은 더 자주 등장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계급 지배 자체에 맞서 싸우도록 고무해야 한다.

장호중

4·11 총선 평가

진보의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

▶ 3면에서 이어짐

비록 이번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선거 패배를 모면했지만, 우파의 위기와 분열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먼저 이명박과 친이계 측근들은 이번 선거에서 거의 궤멸을 당했다.

따라서 정권의 레임덕 심화,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력 약화, 측근 비리 폭로 등이 계속될 수 있다. 총선 패배를 모면한 박근혜가 우파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이명박 세력을 안고 갈 수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세력과 결별을 시도할 수도 있다. 어느 방향이든 우파 내부의 균열 요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수도 권과 중도층에서 ‘확장성의 한계’를 겪고 있는 박근혜의 약점이 우파 분열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

패배를 모면한 우파가 자만심에 빠져 반동적 정책을 강행하는 상황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1996년 총선 때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며 성공한 김영삼 정권이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다가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러낸 게 대표적이다. 그런데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볼 때 우파의 개악과 반동 시도는 계속될 가

능성이 크다. 대선을 앞두고 우파 결집을 위해 서라도 그럴 수 있다.

따라서 우파가 과반을 조금 넘긴 19대 국회에서는 이런 정점을 둘러싼 충돌의 장이 될 듯하다. 민주당은 그 계급적 한계 때문에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 어정쩡하고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같은 모호한 ‘제3세력’은 이 공백을 파고들려 할 것이다.

연립정부의 위험성

이 상황에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의 일부 지도자들이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넘어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수립을 지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친자본주의 정당과 공동으로 권력을 잡고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진보정당이 갈 길이 될 수 없다.** 현재의 경제 위기와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상 그렇게 수립된 연립정부는 노동계급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IMF 시기에 집권해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등을 추진했던 경험을 보라. 노무현 정부도 집권하자마자 이라크 파병 등을 추진하며 지지자들을 배신했다. 그런

상황에서 연립정부에 참여한 진보정당은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을 공격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함께 책임” 져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야권연대”가 ‘연립정부’로 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여야 한다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의 입장이 옳다. 나아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한계를 볼 때 야권연대도 지금과 같이 묻지마 방식으로 계속돼선 안 된다.

진보진영과 진보정당은 기본적으로 우파에 맞선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 건설을 우선시해야 한다. 선거 등 불가피한 특정 상황에서, 진보의 정체성과 단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이 발전할 때만 우파의 공세와 권력 연장 시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과는 다른 진정한 진보적 정치대안을 구축할 수 있다.



진보진영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해 모인 철도 노동자들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이 발전할 때만 우파의 공세와 권력 연장 시도를 막을 수 있다.

지역주의 — 왜 생겨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최일봉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영향력은 호남에 국한됐고,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득을 볼 수 있었다.

계급투쟁 수준이 높지 않은 시기에 지역주의는 더 크게 작용한다. 특히 낙후하고 후진적인 지방에서는 지역주의가 크게 작용한다. 게다가 “영남 정권”, “영포라인”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지역주의를 계속 부추겨 왔다.

이 글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역주의는 정확히 말하면 “호남인”(호남 출신 타지역 거주자인 사람까지 포함하는 말로 외연이 지나치게 넓다)에 대한 차별 문제다.

호남인 차별을 왕건의 훈요십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그릇된 주장이다. 일제 시대 고등계 형사들이 작성한 독립군 자금원 지도는 곡창지대인 호남에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었고 일제는 이들을 달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호남인 차별은 1970년경 박정희가 김대중과 경쟁하기 시작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는 1963년에 군장성과 정부 고위 관료와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자본가들을 모아 새로운 국가 기구들을 구축했다.(바로 그래서 1997년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를 “34년 만의 일당 국가 붕괴”라고 보는 것이다.)

박정희는 김대중을 고립시키고 자본가들을 분열 지배하기 위해 호남인 멸시를 조장했다. 전두환 정권도 이 전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하지만 모순이 잉태되고 있었다.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로 제품을 만들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한다’는 말로 요약되는 한·미·일 삼각무역에 주로 의존한 경제 성장은 섬유·경공업 중심의 공업화에서 중화학 공업화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경남(특히 울산·마산·창원) 지역 자본가들이 성장했다. 김영삼은 바로 이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대중 파업 이후 폭발적으로 고양된 노동자 운동을 위협 수단으로 사용해 김영삼은 군부와의 협상에 성공하고 ‘3당 합당’을 이룬다(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탄생).

이간질

그는 1991년 봄 강성 우파 총리 노재봉을 앞세운 군부의 반동 시도에 직면해 곤경을 겪었으나, 강경대 열사 치사사건을 계기로 다시 폭발한 항의(“보신정국”)에 부딪힌 군부가 후퇴함으로써 이듬해 민자당 대선 후보가 된다.

호남인이라 해서 30년 가까이 지배 계급 내에서 배제당해 온 김대중은 1996년 12월 26일부터 1997년 1월 중순까지 김영삼 정권을 뒤흔들어 놓은 “노동법 파업” 덕분에 그해 대선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군부 출신 독재자들이 출신지를 따져 야당 정치인들을 고립시키고 권력에 접근할 기회에서 배제하려 애쓰는 동안 그 정치인들은 자기들 나름의 지역주의를 개발했다. 지역주의가 지배 계급을 분열시키는 한편으로, 특정 지역 지배자들과 그 지역 노동자들을 통합시키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의는 한 지역의 노동자와 다른 지역의 노동자를 서로 이간시킨다. 지역주의는 지배 계급도 분열시키지만 노동계급도 분열시킨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계급 협력주의를 조장한다.

이것이 자신에게 이롭도록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김영삼·김대중에 이어 김종필이 가세했고, 이회창도 그랬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많다.

지역주의가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해당 지역의 계급 화해를 고무하므로, 권세가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에 애착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역주의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출신 지역을 초월한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뿐이다. 1987년 6~9월 이래 성장한 대중적 노동운동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들이 지역주의 문제로 골치 썩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최근 통합진보당이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의 기반을 잠식하기 시작한 사례도 이것을 보여 준다.

불법 사찰 폭로의 일등 공신인 언론 파업

파업 확대를 통해 승리하자

KBS 새노조의 불법 사찰 폭로는 단연코 언론 파업이 낳은 정치적 성과다. '김비서(KBS)' 방송에서는 불가능했을 보도가 "공정 방송"을 내건 파업 노동자들의 팻캐스트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불법 사찰 폭로로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한 노동자들은 지난 2주간 더한층 전진했다.

KBS 새노조는 더 많은 이들이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고, 이에 응답해 보직 간부들이 파업 성명을 발표했다. 업무에 복귀했던 1박2일 PD 등도 다시 파업 대열에 합류했다. 사찰 폭로 직후 사측이 51명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 속에서 정말 반갑게도 KBS 구노조도 파업을 예고했다. 규모가 크고 기술직을 포괄하는 구노조가 동조 파업에 나선다면, 방송 차질은 훨씬 커질 것이다.

금속노조가 신문 광고를 내는 등 파업 지지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

이 속에서, 언론 노조들은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진 기구들을 개혁해 MB 아바타들을 쫓아내고, 민주적 의사를 반영할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다만, 민주통합당의 국회 행보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개혁적인 안이 통과될지, 편집

권 독립을 보장할 실질적 조처들이 보장될지는 전적으로 투쟁의 힘에 달렸다.

사실 언론 노조들은 그동안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회에 상당한 기대를 걸어 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언론 문제에서도 일관되게 개혁적인 세력이 아니고, 몇 번이나 배신적 타협과 후퇴도 해 왔다.

따라서 "여당에 기죽지 말고 야당에 너그럽지 말자"는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의 말이 옳다. 필요한 것은 민주통합당에 기대지 말고 아래로부터 투쟁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와 낙하산 사장들이 그칠 줄 모르고 악랄한 징계·탄압 세례를 퍼붓고 있는 지금, 투쟁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빨리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려면 방송 차질을 확대해 시청률을 낮추는 게 효과적이다. 시청률이 광고 수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제조업체는 라인을 세워 회사에 타격을 주지만 방송을 세울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언론 노동자들은 실제 방송을 세울 힘을 갖고 있다. <무한도전>이 9주째 결방되면서 광고 수익이 반토막 나 2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것을 보라.

물론, 외주화가 파업 효과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많은 스태프의 밥줄이 PD의 손에 달려 있다"

고 한 데서 드러나듯, PD들이 스태프의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함께 싸우자고 호소한다면 방송을 멈출 수 있다.

더구나 MBC에서 일부 방송 작가들은 "파업에 나선 이들에게 누를 끼칠까 걱정"해 사측의 지시를 거부하고 결국 방송사를 떠나기까지 했다.

KBS의 한 방송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담당 PD는 해당 프로그램의 작가, 카메라맨, 편집팀 등을 모두 구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신들의 요구를 걸고 함께 싸울 테니 같이 파업하자'고 하면 모두 일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PD의 공백을 메우며 사실상 파업 파괴자 구실을 하는 제 모습에 이렇게 괴롭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체인력

그런 점에서, 일부 PD들이 대체인력 투입을 도운 것은 아쉽다. 시청률 경쟁에 "몸값"이 좌우되는 현실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MBC 아나운서들처럼 파업 효과를 제약하는 대체인력 투입에 반대해야 옳다.

특히 MBC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들을 총선 방송 제작에 투입한 것은 아쉽다. '이런 불공정한 방송에선 총선 보도 못 한다'(정영하 위원장)고 선언까지 한 마당이었는데 말이다.

민주노총 등은 언론 파업 연대를 위해 시청 거부운동을 하고 있는데, 파업

당사자들이 시청률을 걱정해 총선 보도에 나선 것은 옳지 않았다.

물론 방송을 마비시키면 개별 노동자들에게 징계나 손배 등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노조가 집단으로 맞서 승리하고 징계 시도를 무력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KBS 새노조가 구노조의 파업을 적극 호소하고, 좌파적 단결을 추구할 필요도 있다. 구노조 지도부가 사측에 협조적이었고, 지금도 낙하산 사장 퇴진 요구를 비껴가는 등 우려스런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구노조는 사장 선임 구조 개선을 내세우며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구노조 지도부의 잘못을 이유로 구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사측에 맞설 기회, 파업 효과를 높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새노조는 기술직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를 결합시키며 투쟁을 전진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로비 농성 등을 통한 피켓라인을 형성하며 파업 대열을 늘려야 한다.

'MB 언론장악 심판, MB 낙하산 퇴출, 공정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실질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기구의 주요 단체들이 총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대 집회 건설 등을 방기해 온 태도는 하루 빨리 교정돼야 한다.

박설

더 민주적 언론을 위한 요구

지금 언론 노동자들은 정권의 앵무새 이길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 여러 쟁점에서 99퍼센트를 위한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나섰다.

언론 노동자들은 낙하산 사장 퇴진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래로부터 투쟁으로 이런 요구를 이뤄낸다면 이후에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노동자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요구는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KBS, MBC는 이사회와 사장을 대통령과 여당의 입김에 따라 임명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과 이사회 문제가 불거졌다. 따라서 이사회와 사장 선출 과정에 언론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제도가 필요하다.

또 편성·보도·제작국장 직선제를 시행해 제작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운동과 이후 투쟁 과정에서 국장 중간평가제 등이 도입됐는데 이런 아래로부터 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언론 통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하고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더 민주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언론의 상업화를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업화 반대

방송이 갈수록 상업화되면서 단기적인 시청률 경쟁에 치우쳐 1퍼센트만을 대변하며 이 체제의 진정한 문제점을 가리는 언론의 부정적인 기능이 커지고 있다.

광고에 더욱 종속되고 상업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는 방송은 재벌 광고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방송 제작에서 늘고 있는 외주화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외주화는 시장경쟁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1991년부터 의무화돼, 지금은 드라마, 예능뿐 아니라 시사·교양프로그램도 외주제작이 비일비재하다.

외주화 이후 스태프들이 한 달에 1백만 원도 채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외주 회사들이 임금을 체불하고 떼어먹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눈치를 더 봐야 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더 힘들어진다. 노동조합은 약화되고, 방송사 고위 임원들은 더욱더 무소불위가 됐다.

따라서 민영 방송이 사실상 광고 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한 미디어법 법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 방송사와 광고영업을 분리해 방송이 광고에 더욱 종속되는 것을 막고 조중동의 종편을 폐지해야 한다.

외주화를 중단하고 계약직을 정규직화해서, 계약직 앵커·PD 등이 사측의 입맛에 따라야 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이런 개혁들은 민주당에 의존해서 이룰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김대중 정부는 MBC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언론 상업화를 밀어붙였다. 노무현 정부도 이라크 파병, 한미FTA와 같은 비민주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언론을 통제했다.

정부와 자본의 언론 통제에 맞서려면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커지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정성영



방송3사 공동 파업 집회 파업 효과를 높여 방송을 멈추고, 연대를 확대하면 승리할 수 있다.

피켓라인의 중요성

최근 KBS 파업 기자들이 동료·선배 노동자에게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MBC 노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런 행동은 지난 2백 년 동안 노동계급이 경험을 통해 발전시켜 온 '피켓라인'이 했던 구실과 유사하다.

피켓라인은 파업 대열을 유지·확대하려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열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피켓라인은 사용자 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고, 노동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파업 참가자의 대오 이탈을 막아 왔다. 1992년에 MBC 노동자들이 로비에서 집단적으로 농성과 집회를 지속한 것이 피켓라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피켓라인은 세계 노동운동의 중요한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가져다 주곤 했다. 피켓라인은 1970년대 초반에 영국 보수당 정부를 끌어내린 광부 파업에서 중심적인 구실을 했다.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피켓라인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었다. 1972년에 광부와 기술직 노동자 수천 명은 함께 피켓라인을 형성해 영국 버밍햄 근처의 석탄 창고를 봉쇄했다. 이것이 정부의 패배를 결정지었다.

피켓라인은 연대를 건설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광부 파업 노동자들은 다리에 "피켓라인"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철도 노동자들이 이를 존중해 열차를 멈추고 파업에 연대했다.

이 때문에 사장들은 피켓라인을 싫어한다. 피켓라인이 파업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지금 방송사 파업에도 이를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예컨대, KBS 새노조 조합원들이 방송국 입구에서 농성을 하며 파업의 초점을 형성하고 구노조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동참을 호소한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피켓라인이 될 것이다. 구노조 조합원들이 파업 찬성을 가결하도록 하는 강력한 호소가 될 수 있다.

이는 MBC 노조도 마찬가지다. 대체인력을 투입해 방송을 진행하는 사측을 저지하기 위해 피켓라인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김준호



1992년 MBC 로비 점거 농성

조지프 로빈슨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정치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이 KTX 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총선 전부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칠 것”고 으름장을 놔 왔다.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를 면하고, 이명박도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KTX 민영화 공세는 더 빨라질 듯하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이미 3월 말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민영화를 강행하면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4월 21일 대규모 집회도 계획했다.

정부가 “철도 구조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며 민영화에 매달리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KTX 민영화에는 재벌과 ‘MB 인맥’의 직접적인 이윤 동기 외에도 지배 집단 전체의 더 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정부는 KTX 민영화를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분노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돼 왔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조차 기층의 불만을 의식해 ‘복지 정당’ 시늉을 해야 했다.

그러나 저들은 말만 그럴 뿐, 위기의 대가를 기업주와 부유층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떠넘기려 한다. KTX 민영화는 그 신호탄과 같다. 한미FTA 강행처럼 말이다. 끝이 안 보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통전가 정책을 재천명하고, 사회 전반으로 구조조정을 다시 확산하는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전환점

그런 점에서, 일부 사람들이 총선을 앞두고 KTX 민영화 연기를 요구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막연한 기대를 건 것은 부질없어 보인다.

KTX 민영화 강행 시도는 우파의 지지 기반을 결속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박근혜의 정치적 필요에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박근혜가 기업주 집단 전체의 이익을 거슬러 KTX 민영화 반대 입장을 지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 박근혜보다야 민영화 반대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을 맺은 민주통합당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훨씬



KTX 민영화 저지 1차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인 KTX 민영화에 맞서 광범한 연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KTX 민영화에는 재벌과 ‘MB 인맥’의 직접적인 이윤 동기 외에도 지배 집단 전체의 더 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정부는 KTX 민영화를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많다. 민주통합당은 운동의 압력에 이끌려 KTX 민영화를 반대했고 정동영·문성근 등도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적잖은 노동자들이 여소야대 무산으로 약간 낙담한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를 KTX 민영화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로 볼 수는 없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위기 상황에서 어부지리를 청

거를 뿐이다. 국민 70퍼센트가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 민영화가 대중적 반발에 직면하면 이명박과 함께 새누리당의 극심한 정치 위기도 재현될 것이 뻔하다.

민영화 저지 투쟁은 민주통합당에 독립적인 필요가 있다.

따지고 보면 KTX 민영화는 전면적인 철도 민영화를 시도했던 김대중 정부가 길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도 노무현 정부의 철도 ‘상업화’와 다르지 않다. 민주통합당은 신자유주의 반대 정당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립한 정당이다.

민주통합당

게다가, 민주통합당은 번번이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지난해 말 한미FTA 반대 투쟁에서도 운동을 지지하는 듯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날치기를 방조하면서 운동을 혼란에 빠뜨렸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에 기대를 걸고 국회를 통한 해결책을 좇으며 투쟁 건설에 소홀해선

안 된다.

문제는 아래로부터 투쟁에 힘을 쏟고 강력한 파업을 건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신호탄인 KTX 민영화에 맞서 반신자유주의의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저들이 구조조정 필요성을 천명하려는 상황에서, 우리 편도 전체 진보진영의 드넓은 연대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사회 전반에 누적된 반재벌·반신자유주의의 정서, 개혁 염원 대중의 변화 열망과 결합하면서, 언론 파업,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화물연대 투쟁, 민주노총 파업 등과 연결시켜야 한다.

철도노조 이영익 위원장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필공(필수유지업무제를 준수하는) 파업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전·선동·조직도 시작해야 한다. 적잖은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측의 혹독한 탄압을 걱정할 테니 말이다.

우리 운동은 지난 10년 사이 대대적인 민영화 시도를 두 차례나 저지한 저력이 있다. 2002년 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파

업과 2008년 촛불시위 같은 정치투쟁을 조직해 맞선다면 KTX 민영화 시도를 저지할 수 있다.

정충남

새로 나왔습니다



KTX민영화: 재앙의 신호탄
— 정치적 분석과 투쟁 방향
강동훈 외 지음 / 다함께 / 3천 원
구입 문의: 02-2271-2395

이렇게 생각한다

시리아 민중에게 총을 놓으라고 해야 하는가

최근에 교황까지 나서서 시리아 휴전을 호소하는 데 동참했다. 휴전만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평범한 시리아인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다.

서방 권력들은 자신들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휴전을 도입하고자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아사드의 학살 종단을 넘어서 휴전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서방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휴전을 감시할 것이다. 그래서 저항세력을 아사드 정권과 똑같이 취급하며 저항세력들에게도 휴전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왜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투쟁을 멈춰야 하는가?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과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부와 특권을 유지하기



시리아 민중이 정의를 위한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위해 싸우는 것을 비교할 수 없다.

한편에는 엄청난 화력으로 무장한 아사드 군대가 있다. 다른 한편에는 평범한

민중이 구할 수 있는 어떤 무기라도 움켜잡고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다. 아사드는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는 판돈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생사를 건 투쟁이다.

아사드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중의 광범위한 혁명이 계급투쟁에서 궁극의 수단이다. 시리아 민중은 지배계급 권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혁명은 협상 수단이 아니다.

잠재력

수십 년을 독재 치하에 살아온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물리치려 했던 바로 그 학살자들과 회의탁자에 앉아 협상을 벌여야만 하는가? 혁명을 건설하고 있는 시리아 민중은 협상 대신 이 낡은 정권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 시리아 민중은 승리와 정의를 원한다.

혁명적 정의는 여러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지배왕조를 끝장내기 위해 차르와 그 가족이 살해됐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는 가로등에 목이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는 자국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다.

자유를 위해 매일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시리아 민중은 정의를 위한 자신들의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 민중은 아사드를 끌어내릴 수 있다. 시리아 혁명가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할 권리가 서방에게는 없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98호 / 번역 최용찬

21세기에 들어 거의 모든 정치인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에 헌신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사르코지, 메르켈, 캐머런 같은 이들만 아니라 심지어 파시스트 정당인 BNP(영국국민당)의 닉 그리빈 같은 자마저 그렇게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파시스트들은 스스로 스웨덴민주당이라고 부르며, 이집트 무바라크 정부의 집권 정당 이름도 국민민주당이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 준다. 냉전 시대 학자들과 대중매체의 지원 아래 민주주의는 '자유'란 개념과 함께 '서방' 체제를 정당화하는 핵심 개념으로 발전했다.

이런 관점에는, 세상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서방과 전체주의적 개인 동방의 공산주의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많은 체제 옹호론자 —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자들 — 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좀더 깊이 들여다 보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지배자들의 명세가 혼재진 것은 현대 사회에서 피억압 민중이 지닌 잠재적 힘 — 그 힘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 노동계급이 증가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 을 증명하는 것이고 지배자들이 그러한 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제 지배자들은 민중을 지배하려면 반드시 '민중의 이름으로' 지배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가들의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과도 전혀 다른 문제다. 지난해 11월 1일, 그리스 총리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는 유럽중앙은행(ECB), IMF와 합의한 '구제금융 계획'(다시 말해 가혹한 긴축 프로그램)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장'(다시 말해 자본가들), 언론, 메르켈, 사르코지 등은 투표를 통해 결정할 권리를 민중에게 부여한다는 생각에 분통을 터뜨리며 격렬히 반발했다. 파판드레우는 긴급 회담을 불러가 이러한 투표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들었다.

이들 이후 국민투표안은 철회됐고 일주일 후에는 파판드레우가 물러나고 선출되지 않은 루카스 파파디모스가 신임 총리가 됐다. 언론은 파파디모스를 '기술 관료'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말은 이번 경제 위기에 쓰인 대부분의 전문 용어들 — '양적 완화', '손실 분담' 따위 — 처럼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고 고안된 용어일 뿐이다. 파파디모스는 은행가다. 그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그리스은행 총재였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ECB 부총재였다.

또, 이탈리아의 국제 부도 위기가 심각해지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사임하고 또 다른 선출되지 않은 '기술 관료'인 마리오 몬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몬티는 경제학자고, 유럽연합 집행위원, 폴드만식스와 코카콜라의 국제 고문 출신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9일에 이탈리아 대통령에 의해 '총신 상원의원'으로 임명됐고, 고작 일주일 후에 은행가들과 기업주들의 지지를 받는 "거국 일치 내각"의 총리로 취임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사례는 경제 위기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국제 은행가들이 요구하는 긴축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민이 자신의 정부를 뽑을 민주적 권리가 쉽사리 '보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이러한 긴축 조치들은 매우 혹독해서 선출의 압력을 받는 정치가라면 누구나 채택할길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르코지와 메르켈은 모든 유럽연합 국가의 재정 통합을 확대하고 각국에 더 엄격한 예산 규제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리스본 협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력을 더욱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대매체 자본주의와 민주주

의는 실제로 무슨 관계란 말인가? 이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등장과 현대 민주주의의 등장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지만 둘 사이의 연관성은 흔히 주장되거나 암시되는 것보다는 훨씬 간접적이다.

봉건제에서 자본가 계급은 봉건 귀족에게 종속됐다. 당시 자본가 계급은 소수였지만 이미 착취 계급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권력을 쥐려면 자신을 전체 사회의 대표자인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다. 이에 관해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사회주의, 공산에서 과학으로>에서 이렇게 말했다. "봉건 귀족과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시민계급(부르주아) 사이의 적대는 착취자와 피착취자 사이의, 게으름뱅이 부자와 가난한 노동자 사이의 적대와 공존했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자본가 계급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특정 계급을 대표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전체 인류를 대표한다고 내세울 수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본가 계급은 추상적인 권리 선언을 골작 만들어냈다. 그러한 것들로는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부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으며, 신은 이들에게 빼앗을 수 없는 몇몇 권리를 부여했다.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있다" 하고 말하는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 그리고 그 후속인 미국 권리장전, "자유, 평등, 우애"를 외친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인권선언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자본가 계급과 부르주아 혁명의 성장 과정은 다양한 형태의 군주 권력과 귀족 권력에 대한해 의회 통치를 추구하는 싸움과 관련 있었다. 16세기 네덜란드 독립전쟁 때 주연합의 의회가 한 구실, 1642년 영국 혁명 때 의회와 왕 사이에 벌어진 전쟁, 프랑스 혁명 때 삼부회와 국민의회가 한 구실 이 바로 그러했다.

그러나 실상 '인간'이나 '보편'에 대한 헌신은 항상 종래한 예외 조건과 여러 가지 회피 조항을 담고 있었으며 실제적인 '보편'과는 거리가 멀었다. 1689년 권리장전에서의 가톨릭 교도와 미국 독립전쟁 때의 흑인 노예의 경우는 그 고전적 보기이며, 당연하도 '인'에게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식민주의의 희생자인 원주민이나 토착민에게는(따부새 아야 떼몽) 어떠한 인권이나 정치적 권리도 부여되지 않았으나, "재산권"은 항상 가장 신성한 권리로 신주 모시듯 다뤄졌다. 또한 의회 통치를 추구하는 자본가 계급의 열정이 보통 선거권의 확립으로까지 확장된 적도 없었다.

1647년의 퍼트리 논쟁에서 헨리 아이어턴(급진적 수평파인 레인즈버러에 맞서 올리버 크롬웰을 대변한 인물)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 왕국에 영구 불변의 이해관계들 갖지 않은 사람은 나랏일을 처리할 때에 자기 이익이나 몫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야 할 법들을 결정할 사람으로 나서거나 그런 일을 할 사람을 고를 권리도 없다."

아이어턴이 언급한 "영구불변의 이해관계"라는 말은 소유권, 특히 토지 소유권을 뜻했다. 그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필연코 투표를 이용



지난해 투쟁을 통해 독재 정권을 타도한 이집트 민중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이집트 민중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자본주의 vs 민주주의

존 몰리뉴가 자본주의가 보편적 자유를 요구하며 등장했지만, 민주주의는 늘 투쟁을 통해 확대됐고 지금도 결코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존 몰리뉴는 영국 포츠머스 대학 '예술사와 철학' 교수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등을 썼다.



프랑스 혁명에 참여한 평민 여성을 그린 당시의 삽화

해 재산의 지배를 끝내려라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은 당연히 말도 안 되기 때문이었다. 보통선거권(다시 말해 노동계급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반대는 적어도 19세기 말까지 영국의 자본가 계급과 세계 각국 자본가 계급의 공통된 태도였다.

19세기의 자유주의 역사가인 맥콜리는 "보통선거권은 정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그러한 발상은 문명화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하고 썼다. 심지어 위대한 자유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마저 자신의 책 <대의정치론>에서 평등한 보통선거권에 반대했다. 육체 노동자 계급이 다수라는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이 투표할 권리를 정취하는 싸움은 노동계급 자신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기나긴 투쟁을 낳았다. 그 과정에서 1819년의 피털루 대학살, 1838년부터 1859년까지 벌어진 위대한 차티스트 운동, 1871년의 파리로뮌, 1893년의 벨기에 총파업, 여성 참정권 운동,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벌어진 미국의 공민권 운동

같은 많은 기념비적인 싸움들이 벌어졌다. 1977년에 <뉴레프트 리뷰>에 발표된 '자본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성장'이라는 기사에서

피란 테르본은 17개 주요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1900년까지 완전한 보통선거권을 채택한 곳이 한 곳도 없었음을 보여 줬다. 오스트레일리아가 1903년에 최초로 도입했고, 뉴질랜드가 1907년에 그 뒤를 따랐다. 조금이나마 진전된 보통선거권을(1928년까지 영국에서는 30세 이하 여성이 참정권을 얻지 못한 것과 같은 무수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확립한 결정적인 시기는 1917년에서 1920년 사이였다. 이 시기 보통선거권 확대 사례로는 오스트리아(1918), 캐나다(1920), 핀란드(1919), 독일(1919), 스웨덴(1918), 영국(1918)을 들 수 있다.

별로 보통선거권답지 않은

다시 말해서, 대체로 참정권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을 휩쓴 혁명 물결의 부산물로 노동계급이 획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정권을 흔히 민주주의의 품질 보증마크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자유롭고 "조작되지 않은" 선거로 자주적 의회를 선출할 경우에만 의미있는 예기다. 무바라크 집권기에 이집트에서 정기적으로 치러진 선거나 1918년 독일 혁명 이전에 존재했던 황제한테 금신거리는 의회 따위는 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투표는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조직의 자유, 파업권, 저항권, 법 앞의 평등 등과 같은 민주적 권리들의 꾸러미 가운데 일부다. 투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이러한 권리들을 획득하는 과정도 도입했고, 뉴질랜드가 1907년에 그 뒤를 따랐다. 조금이나마 진전된 보통선거권을(1928년까지 영국에서는 30세 이하 여성이 참정권을 얻지 못한 것과 같은 무수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확립한 결정적인 시기는 1917년에서 1920년 사이였다. 이 시기 보통선거권 확대 사례로는 오스트리아(1918), 캐나다(1920), 핀란드(1919), 독일(1919), 스웨덴(1918), 영국(1918)을 들 수 있다.

대체로 많은 예외와 단서를 달고(예를 들어 중국과 같은 사소한 경우들과 중동의 심각한 경우들 같은) 그 전부터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은 계속되는 계급 전쟁 속에서 불안정한 타협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한편으로 그러한 타협은 자본가 계급의 팔목을 비틀어 얻어 낸 진짜 승리들이므로 축하하고 지켜 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은 약간의 사회적 안정과 같은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배계급들과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더불어 대체로 잘 지낼 수 있다는 것과, 지배계급이 느끼는 공포와 달리 재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금하는 데 투표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의 지배계급들이 차츰 이해하게 된 것을 반영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주의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민중의 통치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벽한 형태에서조차 결코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었다. 사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언제나 — 마르크스의 말을 빌면 — "자본가 계급의 독재"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이러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가장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와 정부조차도 핵심 생산 수단이나 사회에 축적된 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선출되지 않은 자본가들의 수중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자본주의적 경쟁 법칙에 따라 그것들이 작동한다.

따라서 선출된 정부는 대개 자본가 계급이 정하고 자본가 계급이(시장, 기업, 기타 등등) 수을 가능한 한계 안에서 통치하며 이를 머뭇거리는 정부는 투자 중단,

자본 도피, 그 나라 통화에 대한 투기 공격으로 거의 항상 굴복시킬 수 있다.

둘째, 선출된 의회는 국가기구(군대, 경찰, 사법부, 행정 조직, 기타 등등)의 일부이자 그것과 더불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국가기구는 선출되지 않고, 매우 위계적이며,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와 수천 가닥으로 —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이데올로기적으로 — 묶여 있다.

사회의 결정적인 물리력을 집중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이러한 국가기구는 정부 정책을 실행할 실제적인 열쇠를 보유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실제로 정부를 대신할 수도 있다.(다시 말해 1973년 칠레에서처럼 선출된 좌파 정부를 무너뜨린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

셋째,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사회의 지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배적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전체 정치 과정의 틀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가정에 —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이윤 논리가 자연스럽고 변화 불가능하다는 가정 — 맞춰진다. 그리고 나면 자본주의적이고 국가 통제를 받는 언론이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가정을 특정한 정책과 사고방식으로(긴축의 필요성, 파업의 무책임성, 기타 등등) 바꾼다. 더욱이 자본가와 노동계급 사이에 거대한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선거를 포함한 정치 투쟁 그 자체에 각 계급을 대표하는 이들과 정당들은 광장히 불평등한 자원을 지니고서 싸움에 뛰어들게 된다.

게다가 평상시에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본주의 하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외, 착취, 억압에 너무나 시달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느끼므로 그들은 정치에 관여하길 꺼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 투표 기권율은 사회 상층보다는 사회 하층에서 훨씬 그 비율이 높다.

마지막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선거와 선거 시스템은 — 그것이 어떻게 변형되든 상관 없이 — 진짜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원자화된 개인들로서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넓은 지역으로 이뤄진 선거구에서 의원을 뽑을 뿐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뽑힌 정치가는 평균적인 노동계급 유권자보다 훨씬 높은 교육·사회적 지위에 오른다. 그에게 책임을 묻거나 소환할 수도 없다. 결국 이러한 대표자들이 교활하게, 또는 거리낌 없이 부패를 저지르고 자신의 선거 공약임을 묻거나 소환할 수도 없다. 결국 이러한 대표자들이 교활하게, 또는 거리낌 없이 부패를 저지르고 자신의 선거 공약을 뒤집는 것은 지극히 손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자본의 지배를 감추는 허울로 만들지라도 자본가 계급이 이러한 허울이

나마 유지하는 데 주요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또한 강조해야 한다. 그 점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의 파시즘 경험, 그리스의 군사독재(1967~74), 라틴아메리카, 중동 등지의 서방 후원을 받는 무수한 독재 정권들이 되풀이 해서 증명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발전이 당장 노동계급의 노동조합과 정치 단체를 불법화하고, 파업과 시위를 금지하고, 선거권을 박탈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것과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결정적 패기를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가오는 것들이 어떤 형태를 취할지, 파시스트가 필요하면 거러잡고 싶어 할 준비가 돼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노동자평의회라는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대체하려고 노력하지만, 노동계급이 과거 투쟁에서 쟁취한 모든 민주주의적 성과들을 방어하기도 해야 한다는 오래된 교훈을 환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계급 사이의 타협이고, 자본가 계급한테서 얻어낸 양보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는 '권리'와 관행들이 포함돼 있다. 그것들은 비록 어떠한 측면에서도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끝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지배를 제약하고 노동계급과 다른 민중 세력이 그러한 지배에 맞서 조직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웹진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1월 호 번역 정중수

MARXISM2012

7월 26일 (목) ~ 29일 (일) | 장소 : 서울 (후후 공지)

주최: 다함께 | 문의: 02-2271-2395, marxism@marxism.or.kr

맑시즘

2012

평택 투쟁과 제주 강정 투쟁

대추리에서 구럼비까지

김광일

필자인 김광일 씨는 2008년 촛불항쟁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을 맡아 불철주야 투쟁의 한복판을 누빈 투사다. 그는 촛불항쟁의 경험을 정리해《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책갈피)를 썼고,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의 수배와 탄압에 맞서고 있다. 그는 2005~06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평택 범대위)에서 활동한 바 있는데, 그 투쟁을 돌아보며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레프트21>에 투고해 왔다.

제주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투쟁을 보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이 떠오른다. 평택 범대위에서 활동했던 필자뿐 아니라 당시 평택 투쟁에 참가했던 이들도 그럴 것이다. 공통점 때문일 텐데, 평택 투쟁을 돌아보는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군사 전략인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이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한국에 불박이로 주둔하는 대규모 미군 부대의 작전 범위를 동북아와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분산된 병력의 이동을 쉽게 하려고 비행장과 항구가 있는 평택으로 미군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중국을 자극할 것이고,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을 높일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었다.

이에 맞서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기지 확장에 맞서 싸웠다.

아쉽게도 평택 투쟁이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그만큼 퇴적물을 남겼다.

첫째,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이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던 것처럼, 평택 투쟁은 미국의 패권 전략인 “전략적 유연성”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미·중 갈등이 어떤 위험을 낳을 것인지를 폭로했다.

둘째, 평택 투쟁은 2005~06년 노무현 정부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축을 이뤘다. 2004년 8월 노무현 정부가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면서 운동에 전반적인 사기저하가 생겼다. 그러



대추리의 헌병 공격형 전방기지 건설을 위해 군인까지 동원한 폭력 진압을 한 것은 평택과 제주의 공통점이다.

나 평택 투쟁은 운동의 사기저하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2003년 반전운동의 분출 이후에 다시 항의 투쟁을 전국적 초점으로 형성시켰고, 다양한 세력들이 협력해 여러 차례 수만 명이 결집해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이후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맞선 투쟁이 확산할 수 있는 기운을 마련했다.

셋째, 평택 투쟁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민주통합당의 전신)의 친[미국]제국주의 본질과 폭력성을 밝히 드러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지원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 시위자들을 짓밟았다. 군인들이 시위자들을 땅바닥에 짓누르며 포승줄을 묶던 장면은 잊을 수가 없다. 2006년 5월 경찰이 평택 대추분교를 진압할 때 국무총리가 바로 지금의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폭력 진압에 자신감을 얻은 지만원이라는 우익 인사는 “군대가 시위대에 발포했어야 한다”는 소름끼치

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평택 투쟁에서 아쉽게 돌아볼 점도 있다.

평택 투쟁의 성격이 미국의 패권 전략의 일부이자 노무현 정부의 친[미국]제국주의 정책에 맞서는 것이었으므로 이 투쟁은 전국적 쟁점이었다.

그런데 운동 조직자들은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도두리에만 투쟁 장소를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현지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매우 중요했다. 만약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을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았다면 맥빠진 싸움이 될 것이고 정부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싸우는 활동가들의 투쟁은 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초점 구실을 했다.

정부와 우파도 평택 투쟁이 한반도와 동북아 민중의 운명과 이해관계가 걸린 것인데도 지역에 “외부 단체 개입” 운운하며 평택 투쟁을 지역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운동을 이간질 했다.(현재 강정 투쟁에 대한 정부와 우파들의 공격과 얼마나 똑같은가!)

그러나 대추리·도두리에 시야가 집중되다 보니 2006년 기지 공사를 위한 철조망이 들어서고, 저항의 본부 구실을 했던 대추분교가 철거되면서 자신감을 잃고, 범대위 조직자들은 미군기지 확장은 인정하면서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재협상” 요구로 후퇴했다. 운동의 쉼이 꺾인 마당에 정부가 “재협상”을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강정 투쟁

현재 벌어지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평택 투쟁과 공통점이 많다.

우선, 미국과 한국 정부의 동북아 군사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이 그렇다.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국제질서가 불안정해지고 있고, 기지 건설 강행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될 수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구럼비가 파괴되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강정 주민들의 추억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만이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파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강정 투쟁은 지역민들만의 투쟁도 아니고, 제주도민들만의 투쟁도 아니

고,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둘째, 정부의 폭력이다. 평택에서 육군이 직접 나서 폭력을 휘둘렀다면, 강정에는 해군과 해경까지 나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다만 주체의 차이는 있는데 평택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곤봉을 휘둘렀고, 강정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곤봉을 휘두르고 있다.

셋째, 지역민들의 완강한 투쟁이다. 강정 주민들과 현지 활동가들의 투쟁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부각했고 투쟁을 알렸다. 구속과 벌금 폭탄의 위협에도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싸우고 있다. 이들의 용기에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연대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

물론 제주도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현지 시위에 많은 이들이 참가하기 어렵다는 난제가 있다. 강정 투쟁 쟁점의 성격이 전국적인 것이라는 점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투쟁을 전국적 관점에서 벌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맞선 다른 투쟁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택 투쟁과 차이점도 있는데, 시위를 폭력적으로 짓밟았던 세력이 지금 제1야당이라는 점이다. 대추분교를 짓밟았던 정부의 총리 한명숙이 강정을 방문해 시위대에 연설을 하는 보도를 보고 사실 나는 과연 그녀가 일관성 있게 해군 기지를 반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또, 대추분교를 짓밟았던 노무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착수했다는 전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원조 해군기지당”이다. 민주통합당이 준비한 폭약을 이명박이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전력만이 문제가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민과 활동가들이 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데, 반대는 외면하고 고작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명숙은 안보 때문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말도 하고 다닌다. 민주통합당과 독립적인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강정 투쟁의 연대와 승리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가 동북아 긴장을 부추긴다는 국제주의적 관점과, 이명박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전국적 관점에서 “원조 해군기지당”인 민주통합당과는 독립적인 운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할 것이다. 그것이 대추리의 교훈이다.

문정현 신부 추락 부상

또 드러난 해군기지 건설의 폭력적 본질

김지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참가자. '제주 해적기지' 표현으로 해군 당국이 고소해 법적 대응 준비 중

지난해 6월부터 강정마을에 머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온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가 추락 사고를 당했다.

4월 6일 문정현 신부는 제주 강정마을 방파제에서 해경과 대치하다 무려 7미터 깊이의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 아래로 추락해 요추 골절을 당했다.

당시 문정현 신부와 성직자들은 제주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부활절을 맞아 ‘십자가의 길’ 예식을 진행하며 강정 포구 서방파제로 이동 중이었다. 구럼비 바위로 진입하려는 활동가들을 제지하려고 경찰이 뛰어갔고 문 신부가 여기에 항의하던 도중 사고가 벌어졌다.

위험한 곳까지 가리지 않고 진압을 하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에게 가해진 해경의 폭력은 바로 해군기지 자체의 폭력성을 보여 준다.

려는 경찰 당국의 명령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빚은 것이다.

문정현 신부의 말처럼 “문제의 핵심은

추락 과정이 아니라 위험한 지역에게까지 경찰력이 배치되는 상황”이다. “무조건 막으라는 지휘관의 지시 [등] … 공권력

이 남용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같은 끔찍한 사고와 폭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해 온 양윤모 영화평론가와 송강호 박사는 연행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경찰 당국은 활동가들이 타고 있는 카약을 전복시키고 수영하는 활동가의 머리를 물 속에서 누르는 등 물불 가리지 않고 폭력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이 같은 인권유린과 폭력 진압에 대해 수차례 항의했지만 경찰 당국과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 사과는커녕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고 구럼비 바위 폭파를 강행해 왔다. 문정현 신부 말마따나 “경찰이 사람이 아니라 레미콘과 화약 차량을 모시고” 있는 꼴이다.

전 경찰청장 조현오는 사퇴 전인 4월 5일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근절

간담회’에 참석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살인적 진압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조현오가 폭력 근절 운운하는 것은 매우 역겨운 일이다. 무엇보다 경찰 당국은 지금 강정마을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은가. 경찰 당국은 지금 자신들이 강정마을에서 휘두르는 폭력부터 근절해야 한다.

문정현 신부 추락 사고로 다시금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경찰력의 만행이 드러났다. 따라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양경찰청장 사퇴와 서귀포 해양경찰서장 파면 요구는 정당하다.

또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권력의 불법·폭력의 난장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이 같은 끔찍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



계급 타협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선택해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부키, 1만 4천9백 원, 4백23쪽.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재벌과의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경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터트 운영위원), 이종태(<시사인> 기자), 세 저자가 최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이하 《선택》)를 냈다.

저자들이 7년 만에 책을 다시 낸 것은 한국 사회에서 총·대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선택》은 강철규·유종일·김상조·김기원·김대호 등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들과 통합진보당을 직접 거명하며 재벌개혁론의 문제점을 논쟁적으로 제기한다.

예를 들어, 《선택》은 재벌개혁론자들이 재벌 해체의 모델로 제시하는 민영 KT를 사례로 들면서, 노동자는 대량 해고하고 주주 배당은 대폭 늘리는 기업 소유 구조 개편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는다.

마찬가지로, 《선택》은 재벌개혁론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외환시장·금융시장 개입을 ‘관치’라고 비판하며 금리 인상과 긴축재정으로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재벌개혁론자들이 “빛이 많은 가게와 기업의 파산이 더 많아[지고], 경제적 약자부터 파산할 거라는 점”을 알면서도 ‘어차피 터질 폭탄은 빨리 터뜨리는 게 좋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선택》의 이런 비판이 설득력 있는 것은, 재벌개혁론이 독과점(재벌 체제 같은)과 국가 개입이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신자유주의자들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뿐 아니라 새누리당조차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재벌개혁론이 시장 개혁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주 자본주의

이처럼 《선택》이 재벌개혁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선택》의 저자들이 이전부터 자유시장 확립이 성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신화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폭로해 온 것과



한국 사회에 강하게 뿌리박힌 재벌에게 양보를 얻어 내려면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노동자 계급의 운동이 필요하다.

관련 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여전히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택》의 약점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바로 주주 자본주의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나타난다.

“2000년대 초중반 기업들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건 한국이건 은행 대출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 저금리 대출 자금이 두드러지게 주택 대출 쪽으로 흘러가게 된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기업들이 주주 자본주의에 포획되면서 단기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78쪽)

《선택》은 재벌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을 ‘수탈’하며 양극화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는 것도 재벌의 본성이 아니라 주주 자본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저성장과 불평등 확대를 전적으로 금융자본이나 주주 자본의 책임으로 돌리고 나서, 《선택》은 국가 개입 강화와 재벌의 경영권 보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신자유주의 이전의 자본주의 형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개혁론이 자유시장과 중소기업 효율성의 원동력이라고 미화하며 중소기업과의 동맹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선

택》의 재벌타협론은 국가 개입과 재벌의 투자 확대를 대안으로 보면서 재벌 같은 거대 산업자본과의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은 재벌개혁론을 비판하고 있지만, 기업·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대전제를 재벌개혁론과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선택》은 노동의 유연(안정)성과 생산성 향상 협조를 주장하고, 무상복지 위해 노동자들부터 먼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며 계급 타협을 옹호한다.

계급 연합

그러나 주주 자본주의론은 신자유주의 이전에 경제를 좌우하던 거대 산업자본들이 왜 주주 자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또는 신자유주의 시대 전까지는 힘이 미약하던 주주 자본이 어떻게 산업자본을 위협할 수 있게 됐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실제로 한국의 상당수 재벌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산업자본들이 배당금을 내느라 허덕이기는커녕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은 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선택》의 주장이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선택》이 주장하듯이 재벌에게 경영권만 보호해 주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이란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설명하듯이, 1970년대에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자 산업자본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자본이 금융 부문에 몰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 개입주의가 더는 경제 성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산업자본을 비롯한 전 세계 지배자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산업자본가들을 포함한 지배자들 전체가 이윤율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것이라면 자본가 계급 일부와 동맹을 맺어 사회 진보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몽상일 수밖에 없다.

재벌의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 내려면 재벌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노동자 투쟁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 사회에 강하게 뿌리박힌 재벌에게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면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노동자 계급의 운동 건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재벌개혁론과 재벌타협론은 노동계급이 자기 착취자를 착취 형태에 따라 좋은 착취자와 나쁜 착취자로 나누어 보도록 고무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계급의식을 좁める 효과를 내, 재벌에 맞서 일관되게 투쟁하기 힘들게 만든다.

실제로 IMF 때 김대중 정권이 ‘재벌 해체’를 내걸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많은 재벌개혁론자들은 그것이 낳는 노동자 공격에 일관되게 맞서지 못했다. 《선택》의 재벌타협론도 효율성 향상을 명분으로 한 재벌들의 구조조정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우리가 재벌만이 문제라는 재벌개혁론이나 금융·주주 자본만이 문제라는 재벌타협론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전망을 갖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설 때, 재벌에 맞선 투쟁을 일관되게 발전시켜 재벌·대기업의 실질적인 양보를 받아 낼 수 있고, 더 나아가 노동자들이 생산수단과 국가 권력을 직접 소유·통제하는 사회를 건설해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강동훈

프랑스 대선

지배계급을 뒤흔들고 있는 급진좌파 후보의 부상

지난 4월 3일 프랑스 남부 툴루즈 거리는 붉은 깃발과 배너로 물결쳤다.

프랑스 대선의 구도를 흔들고 있는 급진 좌파 정치인 장뤼크 멜랑송을 보려고 7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멜랑송은 ‘민중 봉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긴축 반대, 노동자 권리 강화, 부자들에게 1백 퍼센트 과세율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사회당 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런던의 금융중심지를 방문해 ‘나는 위험하지 않다’ 하고 금융가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멜랑송은 자랑스럽게 정반대로 선언했다. ‘나는 위험하다.’

멜랑송이 이끌고 있으며, 공산당과 다른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좌파전선이 이제 파시스트인 국민전선을 뒤로 하고 프랑스의 제3당으로 올라섰다.

지난주 우파 대통령 사르코지는 국민전선 지지자들에게 우파의 표를 분산시킬 게 아니라 자신에게 투표하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사르코지는 그들의



‘민중 봉기’를 선포하는 급진 좌파 멜랑송의 부상은 좌파 성장 기회가 열렸음을 보여 준다.

고통을 “이해”하지만 “국민전선을 지지하면 올랑드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잃어버린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사르코지의 선거운동은 어느 때보다 이슬람

과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적 공격에 기대고 있다.

그는 2010년 연금 파업을 공격해 인기를 많이 잃었다. 또한 억만장자 킬리앙 베렝쿠르[로레알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

을 받았다는 뇌물 추문에 연루돼 있다.

사르코지는 지난달 르자비 속옷 공장이 폐쇄되지 않도록 도와 인기를 만회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부자들의 친구라는 이미지만 강화했을 뿐이다. 공장의 새 소유주는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하며 사르코지와 개인적으로 친구 사이인 [루이비통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다. 이런 상황이 좌파전선의 성공을 부르고 있다.

멜랑송은 올랑드의 긴축 예산안에 지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 사회당 주도 정부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대선 후 실시되는 총선에서 사회당과 협력할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다. 일부 사회당 세력들은 멜랑송이 이런 길을 걷길 바란다. 하지만 이 길은 위험하다.

멜랑송 지지자들은 프랑스 기성 정치권을 뒤흔들었고 누구도 긴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산산조각 냈다.

멜랑송은 지난 2002년 사회당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다. 하지만 그는 유럽헌법 국민투표 반대 운동을 통해 좌파 세력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됐다.

독일에서 좌파당(디링케)이 거둔 성공은 그로 하여금 사회당과 단절하도록 고무했다. 독일에서 전직 장관 오스카 라퐁텐이 사회민주당을 떠나 공산당 등 다른 세력들과 함께 정당을 설립했다.

좌파전선 멜랑송의 해성과 같은 등장은 좌우파를 모두 놀라게 했다.

여전히 올랑드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당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정한 좌파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공백이 생겨났다.

반자본주의신당(NPA)이 내부 위기를 겪고 연금 파업 패배 후 노동자 투쟁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극좌파는 이 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데이비드 세렐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98호 / 번역: 최용찬

노동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위해

공동 파업과 정치 투쟁을 건설하자

김우용 기아차지부, 금속노조 중앙위원

자본주의 이윤 경쟁은 낮에 노동하고 밤에 잠을 자는 인간 삶의 패턴을 바꿔 놔다. 자본가들은 설비 효율을 늘리려고 밤샘 노동을 도입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했다.

야간 노동의 폐해는 지난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독일 수면학회는 심야 노동이 노동자들의 수명을 13년 단축시킨다고 경고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원은 ‘교대제 노동자는 심혈관계질환 위험성이 40퍼센트나 높다’고 밝혔다.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도 수면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오죽하면 유럽 보건기구가 ‘야간 노동은 2급 발암 요인’이라고 규정했겠는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노동시간은 살인적이다. 법에 명문화된 ‘주 40시간 노동’은 꿈같은 얘기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1천7백49시간에 견줘 7백51시간이나 더 일한다.

노동자들은 위해서 이런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게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0퍼센트도 안 된다. 이런 기형적인 임금 체계로 인해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나는 기아자동차에서 19년을 일했는데, 기본 시급이 7천 원, 통상 시급이 9천 원밖에 안 된다. ‘현대·기아차의 귀족 노동자’라는 보수언론의 저주가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오래 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노조는 이미 2005년에 사측과 이를 합의했다.

그런데 사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무려 7년이 지났다.



주간연속 2교대제 투쟁은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 사회적 투쟁이다.

7년

그리고 마침내, 기아차에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간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시범 운영됐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동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오랫동안 심야 노동에 지쳐 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당연한 것이다.

평상시에 우리는 11시간 맞교대를 하고 오전 7시 반에 퇴근한다. 집에 도착해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빨라

야 오전 10시다. 내가 있는 화성 공장의 경우엔 출퇴근 시간만 2시간가량 된다.

눈가리개를 하고 잠을 청해도 숙면은 불가능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주말을 제외하면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들다. 단란한 가정은 사치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야간 근무를 하다가 주변 동료들의 얼굴을 보면, 마치 1천 년은 살아 온 산송장들 같다. 특히 새벽 시간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인지 컨베이어 벨트에 녹아드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는 오늘의 현실이다. 그것이 바로 노동의 소외다.

컨베이어 벨트는 인간의 생체 리듬을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말거나, 새벽이나 낮이나 그저 정해진 대로 똑같이 돈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 잔치를 위해 평균 20년 가까이 이런 야만적인 주야맞교대 근무를 해 왔다.

이번에 실시한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 운영은 이런 끔찍한 현실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줬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수년간 빈껍데기였던 합의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올해 임단투(임금·단체협약 투쟁)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반드시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어떤 핑계도 용납하지 않을 태세다.

일자리, 노동강도, 임금

물론, 자본의 입장에서 생산량이 20퍼센트가량 줄어드는 것을 순순히 응할 리 없다. 그래서 사측은 휴일 축소,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생산량 만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줄어드는 생산량·시간 만큼의 임금을 월급제를 통해 보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금이 20퍼센트 정도 감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생산성을 향상하고 임금을 보전하면 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노동계급이 1백 년 넘게 싸워 쟁취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왜곡하며 고통만 가중시키는 꼴이다.

예컨대, 10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8시간에 해내려면 노동강도를 엄청나게 높여야 한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애초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노동강도가 강화된 만큼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돼 개선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전혀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신규 인원 총원, 노동강도 강화 반대, 임금 삭감 반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지난 10년간 세계 5위 자동차 기업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8조 2천5백51억 원이나 된다. 사내 보유 현금성 자산만 해도 7조 1천6백56억 원이다. 정몽구와 정의선은 지난해 주식 배당만 6백35억 원을 챙겼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할 비용은 충분한 것이다.

급속노조와 특히 현대·기아차지부는 ‘주간2교대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동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어떤 주간연속 2교대제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인원 총원을 더 공격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정규직 채용을 1만 명 이상 늘리라고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 특히 청년들의 지지를 획득하며 전 사회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고 있지만,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벌써부터 탄력 근무제를 말하고 ‘귀족 노동’을 운운하는 등 노동유연화와 노동조건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 정부·여당은 지난해 한미FTA 날치기에 맞선 저항과 조직 노동자들의 결함을 우려해 양보하는 시늉을 했던 것이다. 2백만이 넘는 청년 실업 문제와, 1천만 비정규직 문제, 조직 노동자들의 오랜 노동시간 단축 요구 등이 결합되는 것도 싫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주간연속 2교대제 철회 투쟁은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 사회적 인 문제와 연관돼 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 노조 등 급속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대규모 신규 인력 총원을 요구하며 정치적으로 싸워야 한다. 이때 강력한 공동 파업이 중요하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과 원·하청 공동 투쟁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협의기구를 만들자

현대자동차 사측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시간을 끌고 흡수만 부리고 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강력한 단결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울바르게도 정규직 노조 문용문 지부장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원·하청 공동 투쟁을 강조했다. 지난 달 중순에는 원·하청 노동자 1천여 명이 함께 집회를 해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우파 현장 조직 ‘현장혁신연대’는 “전원 정규직화가 아닌 현실적인 정규직화 방안”을 찾으라고 압박하지만, 이것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경훈 전 집행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요구 수준을 낮추라고 압력을 넣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게 엇그제다.

그런 점에서, 문용문 지도부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3지회(울산·아산·전주)의 8대 요구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문용문 지도부는 ‘정규직 노조 운영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것은 설득할 문제지 후퇴하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모든 사



정규직 노조가 개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정규직 노조 대의원대회부터 노조 통합을 결의해야 한다.

내하청 정규직화’는 이미 급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요구이지 않은가.

정규직화

문용문 지도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1사1노조를 공약하며 당선했다. 그래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의 당선을 기뻐했다.

당시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의 탄압과 전망 부재 등 때문에 거듭 위기를

맞으며 노조 재건과 지도부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더욱 문용문 지도부에 대한 기대도 컸다.

이럴 때,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조로 직가입시키고 공동 투쟁을 했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올해 초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도 직가입을 통한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의 좋은 기회였다.

정규직 노조가 직접 손을 내밀어 한 노

조로 단결하자고 호소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도 크게 높아졌을 것이다. 그것은 문용문 지도부가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문용문 지도부는 1사1노조를 향후 과제로만 제시하고 직가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물론, 좌파 활동가들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주요 현장 조직들이 이 문제에서 의미있는 세력이 되지 못했다. 다함께 울산지회도 직가입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너무 굼뎠다.

이를 지켜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에 확신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바로 2년 전 정규직의 연대가 실현되지 못해 투쟁이 패배한 뼈아픈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사이, 최근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오랜 어려움 끝에 지도부를 선출했다. ‘선(先) 원하청 공동 투쟁, 후(後) 1사1노조’를 주장한 박현제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당선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선택을 거슬러 ‘정규직 노조로의 직가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이다. 오히려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통합을 통한 1사1노조 추진을 제기하는 게 옳다.

지금 정규직 민주파 현장 조직들과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원칙적으로 1사1노조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 3지회는 “원하청 공동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나의 노조로 전진하자”고 제안했고, 문용문 지부장도 비정규직 지회와의 토론을 통해 1사1노조를 추진하자고 했다.

따라서 원·하청 노동자가 공동 투쟁을 진행하면서, 노조 통합(1사1노조)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4월 16일 정규직 노조 대의원대회에서부터 이런 논의를 시작하고 결의한다면 좋을 것이다.

일부 좌파는 “나쁜 1사1노조”와 “좋은 1사1노조”가 있다며 사실상 1사1노조에 반대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지만, 조직 통합이 더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왜 보려 하지 않는가. 지난 투쟁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바는 정규직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모승훈



상하이 북부에 있는 철강 공장 노동자 5천 명이 지난 2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가두 행진하고 있다.

사진 출처: 차이나 레이버 풀리틴

보시라이 제거의 진정한 배경

저항의 폭발을 겁내는 중국 지배자들

3월 중순 중국 공산당은 충칭 공산당 서기장 보시라이를 전격 해임했다. 그의 오른팔 왕리훙이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가 망명을 신청한 지 한 달 만이었다.

중국 혁명 8대 원로 중 하나인 보이보의 아들인 보시라이와 같은 정치 거물이 해임된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에 관한 논의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어떤 이는 '충칭 모델'로 상징되는 그의 '마오주의적 극좌 정책'에 친시장 개혁주의자들이 반격한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는 무자비한 '범죄와의 전쟁'이 중앙의 신경을 거슬렀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공청단과 태자당 사이의 권력 투쟁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는 이들을 모두 나열한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파벌 간 권력 투쟁이라는 주장은 또 다른 태자당 인사인 장더장이 보시라이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보시라이를 시장 개혁에 반대하는 마오주의 인사로 묘사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보시라이의 경력을 보면, 그가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을 결합하는 '중용'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탈마오주의 시대 공산당 관료임을 알 수 있다.

보시라이는 1990년대 다룬 시장일 때 국유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했다. 덕분에 그는 2004년부터 4년 동안 국무부 상무부장(무역부 장관)을 지냈다.

최근 언론 보도들을 보면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당시 그는 외국 자본가들 사이에서 능숙한 영어로 외국인 투자와 통상 문제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자유주의적' 인사로 여겨졌다.

또, 오늘날 보시라이의 상징물이 된 이른바 '충칭 모델'은 마오 시대 경제 모델 — 폐쇄적 국가자본주의 — 의 부활이 전혀 아니며, 심지어 보시라이의 발명품도

아니다.

현 충칭식 경제 정책은 2000년대 초 상하이 출신 관료 황치판이 충칭에 부임하면서 시작했다. 상하이에서는 강력한 국영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황치판은 변두리인 충칭이 성장하려면 국영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감독 아래 10년 동안 국영기업 자산가치가 (주로 보유 부동산 가치 상승 덕분에) 8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충칭은 상하이만큼 부유하지 않았기에 민간 자본 유치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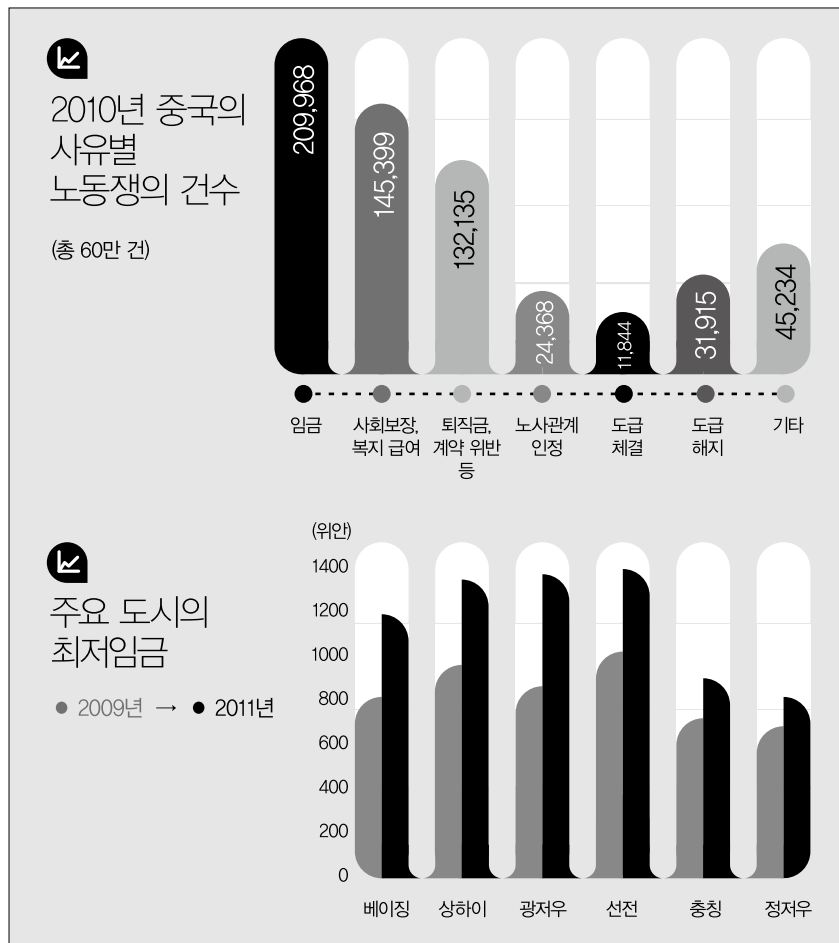
충칭 모델

충칭의 법인세율은 15퍼센트로 중국 평균(33퍼센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2007년 충칭 시 공산당 서기로 부임한 보시라이는 무역부 장관 시절 쌓은 외국계 인맥을 이용해 공격적으로 외자를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충칭 국영기업을 TGA 캐피탈, 블랙스톤 등 서구 금융자본들의 주요 투자 파트너로 만들었다.

충칭 모델을 유명하게 만든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 공공주택 건설, 심지어 호구제도 개혁조차 민간 자본 유치가 주된 목표였다.

예컨대, 노동자들의 자살로 악명 높은 폭스콘은 초대형 공장을 충칭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종업원 수십만 명을 공장 숙소에 가둬 두는 광동의 방식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면 그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기업은 추가 비용을 한푼도 낼 필요도 없다.

호구제 개혁은 연안 지역으로 빠져나간 농촌 인력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필요했다. 또, 농민들의 도시 정착이 확대되면 대규모 공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충칭은 전국 최초로 토지 거래 시장을 만들었다.



자료 출처: 차이나 레이버 풀리틴

중국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개혁을 쟁취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다.

언론에서 특하면 언급하는 보시라이의 충칭 모델과 왕양의 '광둥 모델' 간 경쟁이란 것도 두 가지 상반된 경제 발전 사이의 충돌이 아니다. 그런 주장은 왕양이 2007년 충칭에서 재직했고, 당시 오늘날 보시라이의 업적으로 지목되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을 세웠던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둘 사이의 충돌은 시장 개혁 이후 중국 지방 정부들이 중앙 지원금, 외국 자본, 심지어 나중에는 노동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온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결국 사회·경제적으로 충칭 모델에

는 극좌적인 내용이 없다. 오히려 보시라이가 체포된 후 국내의 민간 자본가들은 충칭상공회의소에 모여 불안해 하면서 충칭에 계속 투자해야 하는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보시라이의 또 다른 공적인 '범죄와의 전쟁'은 한국에서 노태우가 한 것처럼 무자비하고 잔인한 캠페인이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고위 관료가 (자기편 부패에는 눈을 감으면서) 다른 파벌에 속한 지방 부패 관료와 강패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상황에서 딱히 중앙에 위협이 될 것은 없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마오주의 시대의 문화적 상징들을 부활시킨 보시라이의 홍색 문화 캠페인이다.

한 충칭 관료의 말을 인용하자면 보시라이가 이 캠페인을 추진한 목표는 "사람들에게 사상적 위안과 통일성을 제공해 급속한 경제 발전의 모순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보시라이 자신이 그런 경제 정책을 추진한 지배자의 일원이란 점에서 그것은 위선적 캠페인이었다.

그러나 불평등 심화를 성토한 것은 대중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 캠페인의 또 다른 주요 목표는 이런 포퓰리즘적 연사를 통해 보시라이 자신을 '떠우는 것'이었다. 즉, 중앙 — 정확하게는 정치국 상무위원 — 에 자신을 끼워 달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었다.

중앙이 보시라이를 제거한 결정적 이유는, 겉은 화려해도 실질적 파급력은 별로 없어 보이는 이 문화 정책 때문이었다.

중앙이 위협적으로 느낀 것은 문화 캠페인의 내용이 아니었다. 마오쩌둥을 문화적 상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마오쩌둥 초상화는 위안화 지폐를 포함해 사방에 깔려 있다. 문제는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다.

판도라의 상자

보시라이는 캠페인 추진 과정에서 대중 정서를 이용했고 종종 그들을 한곳에 모았다. 신좌파들이 충칭 모델을 찬양하고 다른 관료들을 비판하는 책을 출간하고 토론회를 여는 것을 후원했다.

일부 공산당 중앙 지도자들은 보시라이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다고 봤다.

그들은 중국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하면서 현 통치 체제가 심각한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보시라이와 같은 인물의 선동이 의도치 않게 대중의 행동을 자극할까 봐 걱정한 것이다. 원자바오가 보시라이 해임 전날 '제2의 문화혁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이런 의미였다.

문화혁명의 출발은 자발적 대중 행동이 아니라 지배자들 간 권력 투쟁이었지만 오늘날 중국 관료들은 당이 대중 통제력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 인용한다. 다른 고위 관료들은 원자바오 발언의 의미를 접수했고, 보시라이 제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결국, 보시라이 제거는 보시라이가 아니라 그를 제거한 자들의 상태를 더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대중투쟁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 이제 공산당 지배자들은 말썽꾸러기를 제거했으니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모순이게도 공산당 중앙 지도자들은 당을 보호하려고 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을 제거했다. 위기 때 써먹을 탄약이 하나 줄어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 여파 속에서 중국 경제 모순이 심화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갈수록 치열하게 모순에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도 모른다.

중국 공산당이 1986년 인기 있는 지도자 후야오방을 제거한 지 3년 뒤 텐안먼 항쟁이 발생했던 것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김용욱



계간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2호 2011년 겨울

가격: 16,000원

www.marx21.or.kr



쟁점 오늘의 위기와 저항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
미국 '점거하라' 운동의 의의
오늘날 중국의 저항 운동
계속되는 이집트 혁명
카다피 몰락과 리비아의 앞날

특집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1년 방한 강연 (2)

금융화와 오늘날의 세계경제
사회민주주의 —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인민전선이 진보운동의 패배를 부르는 이유
대담: 오늘의 세계와 혁명적 좌파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1. 마르크스의 경제위기론과 그에 대한 비판

서평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한국 노동계급은 쇠퇴했는가?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가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마르크스21)의 지속적 발간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www.marx21.or.kr)에서 휴대폰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4월 23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투쟁

로비 점거에 지지와 연대를

부당 해고에 맞서 1백 일 넘게 싸우고 있는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들이 총선 전날 병원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이 노동자들은 서로 몸을 끈으로 묶고 “여차하면 목을 매겠다는 각오”로 1층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병원 사측은 경찰과 구사대를 동원해 욕설·협박을 퍼붓고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막았다. 병원 측은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음식물 반입과 기자들의 출입도 막고 있다. 심지어 환자들과 환자 가족의 출입까지도 일일이 검문하고 있어, 환자들의 항의를 사고 있다.

농성 이틀째, 사측은 구사대를 앞세우고 경찰까지 동원해 농성 노동자들을 끌어내려 했다. 조합원들이 완강히 버텨 끝내 조합원들을 끌어내지 못했다. 한 조합원이 실신해 병원에 실려갔다. 함께 농성하던 노조 활동가들도 모두 끌려 나와 지금 로비에는 조합원 7명만 고립돼 있다.

사측의 폭력적 침탈 이후 노조는 밤새 규탄 집회를 이어가며 농성장에 고립된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노동자들은 1백 일이 넘는 투쟁을 거치며 경찰과 구사대의 폭력에도 완강히 버티는 불굴의 투사들이 됐다.

공공병원인 한일병원은 한국전력 공사의 자회사인데, 1999년에 병원이 식당을 외주 업체에 넘겨 버렸다. 그래서 식당 노동자들은 뼈빠지게 일하고도 한 달에 1백 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아야 했다.

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부당한 업무지시,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꿔 보겠



진보경관

다고 지난해 7월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그러자 병원 측과 식당 용역업체인 CJ 계열사가 이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해 버렸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에는 ‘용역업체 교체시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일병원은 보란 듯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50~60대 여성 노동자들이 한 겨울 길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삭발까지 하며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CJ는 3월 말에 손을 털고 나가버렸고 병원 측은 고용 당사자가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정당하게도 병원 측이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지역의 진보정당들, 노조, 진보적 대학생들이 이 투쟁에 연대해 왔다. 이 연대는 병원과 CJ 사측을 압박하는 효과를 냈다. 연대가 가장 확대됐을 때, 병원 측은 직접 고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로비 농성이라는 실력 행사에 들어간 지금, 연대가 더 확대돼야 한다.

비록 작은 병원의 투쟁이지만, 이 노동자들이 승리하고 직접 고용을 쟁취한다면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다.

한전 산하 자회사 노조들의 연대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한일병원 정규직 노조는 조합원들을 구사대로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회사 노조들이 나서 이를 비판하고 연대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정원·김석진

충남대 비정규직

부당 해고 철회하라

4월 5일 충남대 시설노조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충남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조합원들,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청주, 공주, 제천 등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지난해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려고 만든 ‘청소노동자 연대모임’(청연) 소속 학생들도 함께했다.

올해 초 용역업체 측은 시설 노동자 두 명을 문자로 해고했다. 정부가 1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사용기관이 새로운 업체와 계약할 때 고용승계를 명문화해야 하는데도 충남대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을 내리는 정부나 그조차 지키지 않는 충남대나 풀사납긴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이번 해고는 노조 활동을 발미로 한 복직성 해고다.

해고자 중 한 명은 지난해 새로 생긴 노조의 간부였고, 다른 한 명은 그동안 만연해 있던 각종 부당노동행위(교직원 개인 행사 강제 참석, 이삿짐 나르기, 화

장실 청소 등)에 항의하며 싸운 바 있다.

“18년간 일하며 직장에서 내 월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마다 그저 몇 만 원이 오르면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야 학교에서 월급으로 얼마를 책정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동안 소장과 팀장이 월급을 마음대로 정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노조는 해고자 복직을 위해 충남대 시설과, 용역업체, 노동부, 조달청 등 모든 관련 기관과 사람들을 만났지만, 한결같이 ‘우리 책임이 아니다’하는 말 뿐이었다.

‘청연’은 집회 홍보물을 나눠주고 연대를 호소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집회에 직접 참가한 학생도 있었다. ‘청연’은 해고자 복직이 관철될 때까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연대를 호소하고 함께 싸울 것이다.

충남대 당국은 시설노조 해고자를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

정기민·충남대 학생

‘희망’을 요리하다

22번째 비극적 죽음에 있던 그 주의 일요일, 상도역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일일 후원 밥집 ‘하루’를 찾았다.

“지금 투쟁에 함께하지 못하는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지요. 이 공간이 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텐트촌 셰프로 유명한 신동기 조합원의 말이다.

1천 일이 넘는 투쟁, 22번째 죽음과 마주하면서도 힘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 소름 끼치게 아반적인 이 체제에 맞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윤선

케이투코리아

“일 다 때려치우고 파업하자”

이명박의 ‘고용창출 1백대 기업’ 상을 받은 케이투코리아가 신발생산부 노동자 93명을 해고하고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기려 한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자, 사측은 “정리해고를 애기한 적 없”고 “명에 퇴직만 받는다”는 꾀수를 부렸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인도네시아나 개성공단 공장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식당도 없어 본드 냄새가 가득한 현장 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밥을 먹어야 했다. 신발 굽은 기계에 밥을 대워 먹으면서 말이다.

사측이 산재 신청도 못하게 해서, 손가락이 굽고여기저기 아파도 자기 돈을 내고 병원에 다녀야 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기계가 고장이나 한 달 반을 쉬어야 했는데, 월차로 처리한다는 각서까지 써야 했다.

자녀의 입학식·졸업식도 참가하지 못해 사진 한 장이 제대로 없다. 그런데도 월급은 10년 일한 노동자가 기본급과 직책 수당을 다 합해 1백5만 원 수준이다.

케이투코리아가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3위로 성장한 것은 이런 노동자들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제와 생산성을 핑계로 노

동자들을 모두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명예퇴직서’를 쓰면 1년치 위로금을 주겠다. 안 쓰면 못 준다는 사측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억울해서 도저히 그만둘 수 없다”, “남편이 돈 천만 원 안 들고 와도 되니까 끝까지 싸우라고 응원했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이 굳건하게 나오자 사측도 탄압을 강화했다. 회사 문 앞에 용역을 세우고, 관리자가 노동자 얼굴을 일일이 확인한 후 공장에 들여보내고 있다. 업무 시간에 사측의 감시와 채증도 늘었다.

그렇수록 노동자들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용역을 세운 것에 항의하고, 감시와 채증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일부 노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일 다 때려치우고 파업”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인도네시아로 생산 공장을 옮기려는 사측의 계획을 저지하고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

4월 19일에 케이투코리아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연대 집회가 열린다. 이 집회가 강력한 파업과 점거 농성 등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 돼야 한다.

‘케이투코리아 공대위’도 지지와 연대를 확대하려고 애써야 한다.

나지현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위선적 제재와 강경 대응 반대한다

김영익

이 신문을 제작하고 있는 현재(4월 12일) 여러 정황상 북한 당국이 하루이틀 내로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 발사는 국제적 파장과 긴장 고조를 낳을 것이다.

위성 운반체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비슷하고, 북한 당국도 위성 발사 기술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두둔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등이 주도하는 북한 때리기에 동조할 수는 없다. 인공위성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앞장서온 미국이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나로호 발사 경험을 탄도미사일 개발에 써 먹으려 한다.

미국은 인도가 4월 말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다는 소식을 알고도, 북한과는 달리 대처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필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위성 발사에 유엔 안보리 소집과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더구나 미국의 강경 대응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전에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핵실험 등 북한의 반발을 불러, 긴장을 더 높였을 뿐이다.

물론 미국은 이란 핵문제 등 중동에 여전히 깊이 개입해야 하며, 강경 대응 속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도 우려하는 처지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과 미국이 험악한 말들을 주고받겠지만, 이것이 당장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풍몰이에 안간힘을 쓴 것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무엇보다 위성 발사에 대해 한·미·일이 내놓은 대응 계획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내 불안정을 키울 것이다. 미국은 이번 발사를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할 기회로 삼으려 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 MD 체제 구축에 이용하려고 작심한 듯하다.

실제로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은 ‘MD 실전 훈련’을 방불케 한다. 미국은 최신형 MD 레이더를 하와이에서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시켰고, 일본도 도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만도 북한 로켓을 요격하려고 준비한다.

한국 정부도 요격을 준비하는 한편, 보수우익들은 한국군의 보유 장비로는 북한 로켓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MD 참여의 명분을 쌓고 있다.

한·미·일(·대만)을 잇는 아시아 MD 구상이 나오자, 당연히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MD 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이와 맞서려면 중국 전략 핵무기의 능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하고 맞대응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은 중미 갈등에 악영향을 미

칠 게 분명하다. 최근 들어 중미 갈등의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 패배와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로 미국의 위상이 하락한 것과 관련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입지를 쌓아가는 것을 불안해 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떠오르는 중국을 보며 불안감을 느끼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파고들어, 기존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새롭게 동맹국을 늘리는 식으로 중국을 포위·압박하고 있다.

‘악마화’

중미 갈등으로 한층 복잡해진 동아시아 정세는 한반도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줬다.

먼저 미국은 기존의 한미 동맹을 확

대·강화해 왔다. 예컨대 미국은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했고,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 기지는 제주 해군기지와 함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한반도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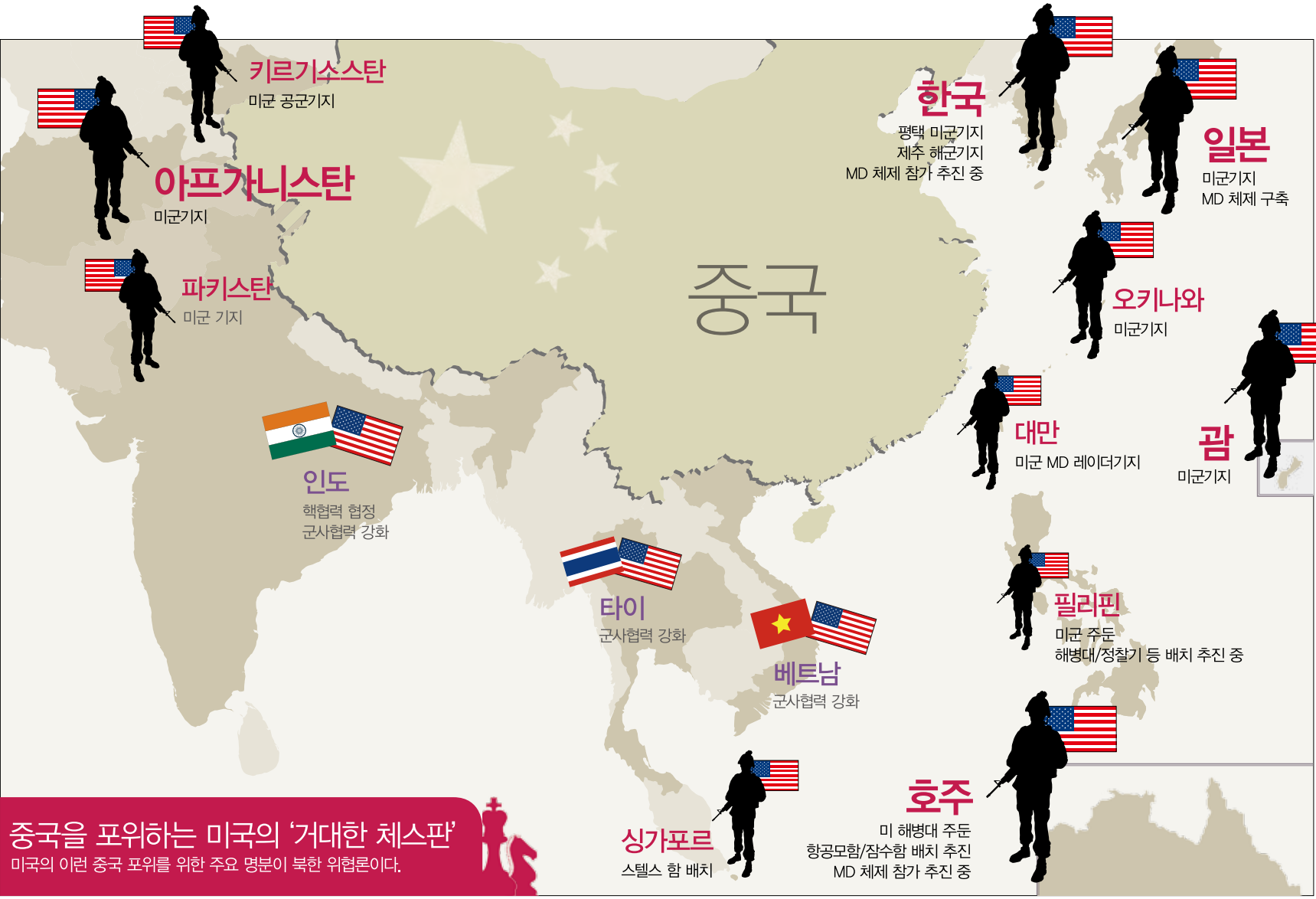
또한 미국은 북한을 계속 ‘악마화’해,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불러일으켜 왔다. 오바마 정부의 무시와 압박에 대응해, 2009년 북한의 위성 발사와 핵실험이 있었다. 이명박과 오바마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대응 훈련을 하는 등 긴장을 쌓아 갔고, 이것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로까지 이어졌고 이번 위성 발사의 큰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기적으로는 봉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미 갈등과 한반도 문제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유사한 일들이 반복돼 장기적으로 긴장을 높여 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악마’인 게 오늘날 동아시아 불안정의 핵심 원인이 아니다. 이 지역에서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 제국주의의 전략이 진정한 문제다. 이에 맞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의 친제국주의 정책에도 반대해야 한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아시아 MD 구상과 맞물려 있다. 이 점에서 민주통합당의 한계도 분명하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MD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처들이 시작됐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추진됐다. 이런 민주통합당과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고 의존해서는, 반제국주의 운동을 제대로 건설할 수 없다.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고, 한국이 MD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북풍’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군비증강에도 매달리는 지배자들에 맞서 일관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는 어디로 — 3대 세습의 불확실한 미래

4월 11일 북한에서는 제4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열렸다.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15일은 김일성의 1백회 생일이다. 이때 김정은은 체제의 본격 출범을 위한 인사 조처 등이 단행될 것이다. 이 일정에 맞춰 북한 관료들은 위성 발사로 북한 체제의 안정과 권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미 사망한 권력자의 생일에 맞춰, 더군다나 그의 손자가 권력을 세습하는 것을 기념하려는 축포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진정한 반제국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인민의 진정한 필요는 아랑곳하지 않고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권력을 세습하는 북한 관료들은 반제국주의는커녕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임을 보여 줄 뿐이다.

한편 남한 보수우익들도 북한이 ‘미제’

에 무모하게 맞서는 호전광인 것 마냥 떠들어 왔다. 북한 독재자들이 비이성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만 몰두한다는 것이다.

현실은 이런 주장들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 3월 북한 외무성 부상 이용호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이 우리와 동맹을 맺고 핵우산을 제공하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용의가 있다” 하고 발언했다. 이처럼 북한 관료들은 기회만 되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 왔다.

축포

그러나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핑계로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묶어 두는 데 관심이 더 많았다.

따라서 중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김정은 정권을 앞으로도 괴롭힐 것이다.

북미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김정은

은 정권은 경제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어진 다. 국제 금융기구들한테서 돈을 끌어오고 해외의 최신 기술과 기계 등을 구하는 데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관료들은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약속하며 인민을 달래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2000년대에도 경제가 그다지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과제를 성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 내 경제 전문가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고 생산 수준은 1980년 중엽의 생산 수준’이라며 낮은 기대를 드러낼 정도다.

식량난도 여전하다.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지금 황해남도에서 아시아가 속출할 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북한이 2000년대에 이룬 부분적 회복은 대부분 중국과의 경제 협력 덕분이다. 김정은 정권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

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중국 경제에 원료를 공급하거나 의류 등을 임가공하는 구실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의존할수록, 그만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리듬에 북한 경제가 종속돼, 중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면 북한도 끔찍없이 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 중국이 지난 2월에 22년 만에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발 경제 위기가 북한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 앞에는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동아시아 최빈국의 젊은 독재자가 능력껏 헤쳐 나가는 게 무척 어려울 것이다. 관련국들과 외교적 기술만으로는 풀 수 없는, 훨씬 더 넓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동역학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의 수위를 둘러싼 이견, 미국의 제재와 협상 과정에 불거질 논란 등은 향후 전개 과정에 따라 북한 판로 내부의 분열을 자아낼 수도 있다. 이때 우리는 장래 펼쳐질 북한의 불안정 속에 북한 노동계급이 민주주의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를 바라야 한다.

이것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당장 중국에서 노동계급의 집단 행동이 성장하고 있다. 중국 노동운동 지원 단체인 ‘차이나 레이버 볼리탄’은 최근 중국 노동자들이 파업과 항의 행동으로 요구 조건을 성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중국의 파업 노동자들은 공장이나 도로를 점거하는 전투적 행동으로 사측의 양보를 얻고 있다.

이런 중국 내 노동자 저항의 물결이 갈수록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해지는 북한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이다.